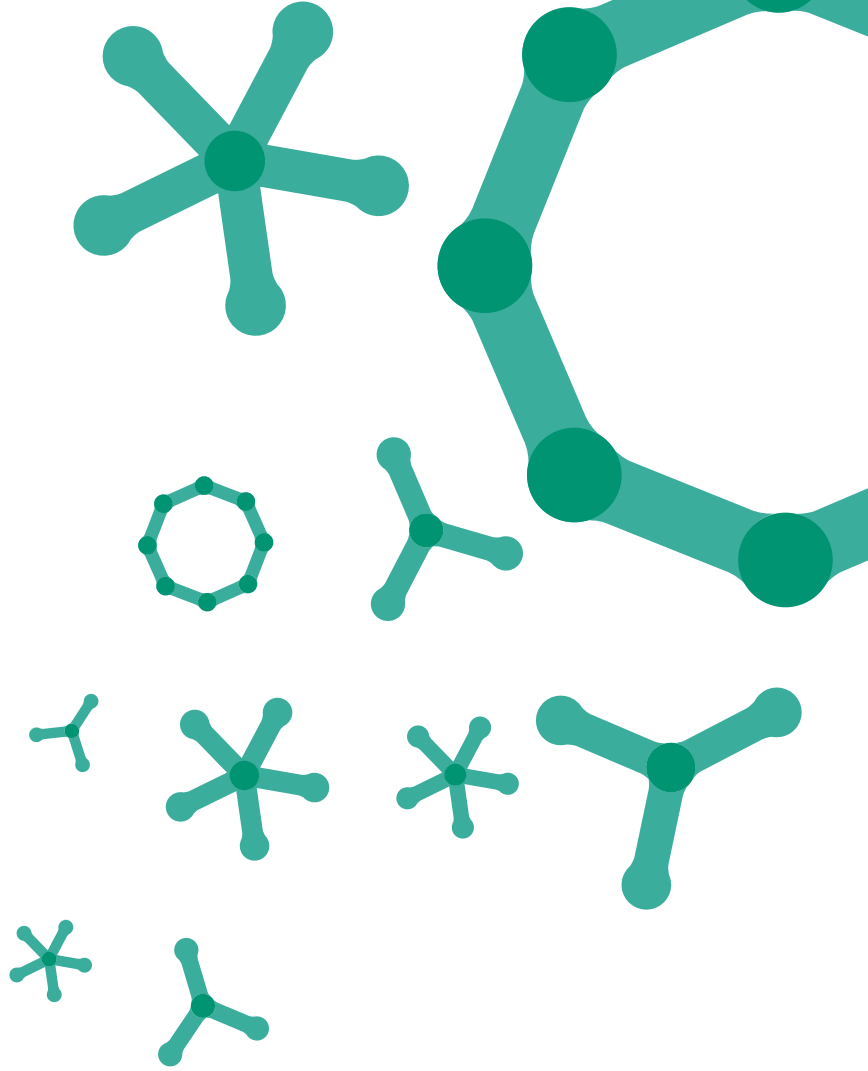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3호



기회균등지수연구

2015.09.



동그라미재단
○ L
The Circle Foundation

동그라미재단 기회균등지수연구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연구책임 구교준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jkoo@korea.ac.kr)

공동연구 김희강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heekangkim@korea.ac.kr)

공동연구 최영준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spyjc@yonsei.ac.kr)

[연구 요약문]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류의 역사는 기회균등 추구의 역사로 불려도 큰 무리가 없어보이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분석하고자 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회균등의 이론적 의미를 John Rawls의 정의론과 Amartya Sen의 capability approach를 통해 밝히고, 둘째,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기회균등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간 기회균등의 수준을 비교하고 한국의 기회균등 현황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Rawls와 Sen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기회균등 지수를 개발. 둘째, 일관된 이론적 틀 안에서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 및 국내 분석, 셋째, 분야별 세대별 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을(한 분야의 불평등이 다른 분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현상) 기회균등지수의 개발에 반영한 것이다.

II. 기회균등 개념의 이론적 고찰과 평가를 위한 이론틀 제시

1. 기회균등 개념의 이론적 고찰: 존 롤즈의 관점에서

기회균등의 가치는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라는 자유주의 가치에 본질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한 기회가 사회에서 제공된 이상,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로 인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용인된다.

위와 같은 전제 아래에 기존의 기회균등 논의는 차별금지 원칙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제할 수 없는 외적요소의 영향력을 인정하며 선제적 정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많은 국가에서 형식적인 차별금지 원칙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회균등 이론화에서 주목한 세가지 지점은 다음과 같다. ①불평등을 기회균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②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불평등의 영역을 나누고 ③구조적 불평등의 수직적·수평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에 관한 세 가지 지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회균등

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회균등의 기준과 지표개발을 위한 이론적 단초는 John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논의와 Amartya Sen/Martha Nussbaum의 capability approach에서 빌려 오고자 한다.

Rawls는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력체(society as a fair system of cooperation)로 상정한다. 이 사회는 정의의 원리로 운영되는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이며, 구체화된 네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제1원리 - ①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
 ②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원리
 제2원리 - ③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④차등의 원리

2. 기회균등의 평가를 위한 이론틀: 마사 너스바움의 관점에서

Sen은 capabilities를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등/불평등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긴 반면, Nussbaum은 국가가 보호하고 담보해야 할 인간이라면 갖춰야 하는 최소한 수준의 capabilities에 초점 맞춘다. Nussbaum은 이를 기본의 사회정의(basic social justice)라고 칭하며(Nussbaum 2011, 40), 어떤 문화와 정치 공동체도 합의할 수 있는, 즉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충실한 10개 핵심 capabilities의 리스트를 제시하였다(Nussbaum 2000, 78-80, 2011, 33-34).

본 연구에서는 Nussbaum의 capability 10가지 영역을 재구성하여 다음의 8개 영역으로 간추렸다. 기존의 10개 영역은 ①생명(life), ②신체건강(bodily health), ③신체무결(bodily integrity) ④감각, 상상, 사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⑤감정(emotions), ⑥실천이성(practical reason), ⑦관계(affiliation) ⑧다른 종(other species), ⑨놀이(play) ⑩환경에 대한 통제(environmental control). 재구성한 8개 영역은 (a)생명/건강, (b)안전, (c)환경, (d)경제, (e)교육, (f)관계, (g)여가, (h)정치참여이다.

[Nussbaum 10개 영역]

[재구성한 8개 영역]

- | | | |
|-------------|---|----------|
| ①생명 | → | (a)생명/건강 |
| ②신체건강 | ↗ | |
| ③신체무결 | → | (b)안전 |
| ④감각, 상상, 사유 | → | (e)교육 |
| ⑤감정 | ↗ | |
| ⑥실천이성 | ↗ | |

⑦관계	→	(f)관계
⑧다른 중	→	(c)환경
⑨놀이	→	(g)여가
⑩환경통제	→	(d)경제
	↘	(h)정치참여

Ⅲ. 기회균등 지수개발 방법론

1.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회균등지수

본 연구는 앞 장에서 도출된 8개의 기회균등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야별 및 종합 기회균등지수를 도출하였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1] 기회균등지수 산출 방법



2. 국내 분석을 위한 기회균등지수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현황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우선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라는 거시분석과 동일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회균등 현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을 동일한 이론적 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본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회균등 및 불평등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맥락을 고려한 국가 간 비교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제 분야의 불평등을 다른 분야의 기회균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의 15차년도 자료(2012년)를 기준으로 가구총소득(임금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기회균등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국가별 기회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ndex를 활용한다. D-index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 정도를 그룹별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dissimilarity measure의 일종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기회균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O-index를 도출하고자 한다.

3. 기존 기회균등 관련 지표들과의 차별성

현재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기회균등 관련 지표들은 ①세대 간 사회적 이동 (OECD, 2010), ②기회불평등지수 (Barros et al, 2009), ③여성경제기회지수 (Economist Intelligent Unit, 2010), ④사회정의지수(Bertelsmann Stiftung, 2011), ⑤사회배제지표 (Burchardt et al, 2002)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회균등 지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지표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기회균등 지수는 Rawls와 Sen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의와 기회균등에 대한 이들의 이론적 논의는 왜 기회균등이 철학적, 윤리적으로 중요한 담론이고, 우리 사회가 왜 기회균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어느 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 둘째, Rawls와 Sen의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기회균등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을 체계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기회균등지수를 도출한다. 셋째, 기회균등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지표와 결과지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를 고려하되 통계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여 최종 기회균등 지수를 도출한다. 넷째, 기존 지표들이 지나치게 거시적인 객관지표 위주이거나 미시적인 설문조사 위주였던 점을 고려하여, 객관지표를 근거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거시지수와 설문조사를 근거로 국내 분석을 위한 미시지수를 동시에 개발한다. 다섯째, 특히 국내 분석의 경우 Rawls가 지적한 기회균등의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한 기회균등지수의 도출을 시도한다.

IV.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

국가 간 기회균등 비교에서는 핀란드(0.88), 아이슬란드(0.88), 노르웨이(0.87) 그리고 덴마크/스웨덴(0.85)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북유럽이 기회균등에 있어서 가장 앞선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멕시코(0.09)와 터키(0.37) 그리고 칠레(0.37)는 가장 낮은 기회균등지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전체 31개국 중 20위에 위치하였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공화국,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보다 낮은 기회균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기회균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미국은 0.60로 동유럽이나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기회균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북유럽 이외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의 대륙유럽 국가들과 기초적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기회균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기회균등지수와 영역점수는 [표 1]과 같다.

[표 1] 국가별 기회균등지수 및 영역별 점수

순위	국가	종합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	합계 ²
1	Finland	0.88	0.73	0.92	0.98	0.92	0.85	0.77	1	0.95	7.11
2	Iceland	0.88	0.87	0.93	0.67	0.94	1	0.70	0.94	0.93	6.98
3	Norway	0.87	0.83	0.88	0.61	0.99	0.95	0.92	1	0.92	7.11
4	Denmark	0.85	0.82	0.88	0.60	0.97	0.73	0.97	0.96	1	6.93
5	Sweden	0.85	0.98	0.83	0.59	0.86	0.92	0.74	0.98	0.85	6.75
6	Switzerland	0.85	0.91	0.88	0.73	0.99	0.80	0.69	0.92	0.77	6.69
7	New Zealand	0.83	0.85	0.95	0.79	0.68	0.98	0.65	0.88	0.73	6.50
8	Austria	0.82	0.88	0.91	0.61	0.84	0.88	0.73	0.75	0.84	6.44
9	Canada	0.81	0.80	0.97	0.83	0.76	0.85	0.61	0.84	0.64	6.31
10	Netherlands	0.80	0.76	0.84	0.69	0.81	0.64	1	0.95	0.83	6.52
11	Germany	0.78	0.74	0.89	0.74	0.72	0.70	0.90	0.84	0.80	6.32
12	Luxembourg	0.77	0.83	0.87	0.44	0.77	0.62	0.81	0.92	0.85	6.12
13	Japan	0.76	0.81	0.99	0.75	0.84	0.73	0.55	0.67	0.50	5.84
14	Czech Republic	0.76	0.55	0.94	0.73	0.72	0.73	0.58	0.70	0.98	5.94
15	Ireland	0.75	0.62	0.94	0.58	0.79	0.83	0.66	0.87	0.74	6.02
16	Belgium	0.75	0.81	0.75	0.63	0.89	0.29	0.80	0.92	0.85	5.95
17	United Kingdom	0.74	0.76	0.96	0.65	0.61	0.64	0.75	0.73	0.68	5.78
18	Australia	0.73	0.90	0.95	0.87	0.54	0.19	0.61	0.77	0.55	5.37
19	France	0.72	0.72	0.83	0.51	0.62	0.72	0.86	0.66	0.81	5.73
20	Korea	0.70	0.68	0.95	0.94	0.66	0.71	0.22	0.50	0.50	5.16
21	Spain	0.68	0.83	0.87	0.52	0.57	0.64	0.58	0.66	0.49	5.15
22	Italy	0.68	0.87	0.84	0.56	0.46	0.62	0.60	0.47	0.61	5.02
23	Portugal	0.64	0.72	0.80	0.52	0.41	0.53	0.59	0.71	0.59	4.87
24	Slovak Republic	0.61	0.22	0.90	0.50	0.53	0.86	0.53	0.61	0.83	5.00
25	United States	0.60	0.59	0.89	0.57	0.51	0.53	0.44	0.72	0.36	4.61

26	Poland	0.59	0.20	0.98	0.65	0.49	0.61	0.42	0.67	0.69	4.70
27	Greece	0.59	0.73	0.87	0.39	0.37	0.57	0.34	0.47	0.49	4.23
28	Hungary	0.51	0	0.89	0.52	0.48	0.67	0.42	0.50	0.74	4.23
29	Chile	0.37	0.68	0.67	0.19	0.06	0.05	0.20	0.45	0.12	2.42
30	Turkey	0.37	0.37	0.79	0.21	0.41	0.21	0.27	0.12	0.22	2.60
31	Mexico	0.09	0.37	0	0	0	0.09	0	0	0	0.47

1. ‘중합’ 점수는 각 영역의 기회균등 점수에 영역별 중요도 가중치를 넣어서 재계산한 것이다.
2. ‘합계’ 점수는 각 영역의 기회균등 점수를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회균등에 대해 OECD 복지국가를 7유형으로 구분한 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①저발전복지국가인 멕시코나 터키 그리고 칠레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거의 전 기회균등 분야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가의 기회균등 정도가 비슷하고, 일부 국가에 따라서 정치나 여가 그리고 경제는 상대적으로 유사하지만, 안전, 환경, 교육 그리고 관계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 내에서 저발전복지국가 유형과 한국은 이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동유럽복지국가유형은 건강이나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은 한국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 건강의 기회균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유럽은 경제적 기회균등 측면에서 확연히 앞서고 있으며, 정치차원이나 여가차원에서도 한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이나 환경의 기회균등에서는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체코가 동유럽에서 월등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남유럽복지국가와 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당히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와 한국의 유사성은 김연명(2013)이나 양재진&최영준(2014)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여가는 남유럽이 높고, 교육은 한국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 경제, 건강, 안전 환경 등에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④소위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 보수주의복지국가유형,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유형) 들은 한국보다 대체로 좋은 기회균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PISA 점수로 대표되는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수치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월등히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치나 여가에서는 월등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균등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경제차원의 기회균등이나 여가 차원에서는 보수주의복지국가나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유형이 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유형은 교육부분이 다소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것을 제외하면 전 분야에서 우수한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회균등지수가 가장 높은 핀란드와 우리나라를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핀란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회균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이나 안전은 한국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건강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 정치, 여가, 관계 분야의 기회균등의 수준은 핀란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휴가와 여가를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로 하나로 여기는 핀란드 사회의 문화와 개인보다는 집단, 특히 일과 직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여가 분야의 가장 큰 기회균등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회균등 뿐 아니라 웰빙이나 행복에 미치는 차이를 함의하고 있다. 동아시아 복지국가유형인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기회균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한 일본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여가 기회균등 수준은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역시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V.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1. 분야별 기회균등 비교

본 절에서는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8가지 capabilities영역 중에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머지 7가지 영역의 기회균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즉 개인의 경제수준에 따라 교육이나 건강, 관계, 여가 등의 기회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앞에서 소개한 D-index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①건강분야는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다’ 혹은 ‘건강한 편이다’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예측확률을 살펴보면 소득 10분위(상위 10%)에서는 64.6%에 달하는데 소득 1분위(하위 10%)에서는 38.5%에 그치고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의 차이가 1.7배에 달한다. 전체 응답자의 긍정평가 평균 비율인 52.3%와의 차이를 고려한 D-index는 0.69로 나타났다.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유무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소득 10분위에서 이들 질환을 가지고 있을 예측확률은 5.3%인데 반하여 소득 1분위에서는 8.4%로 두 그룹 간에는 1.6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치료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예측확률은 소득 10분위가 13.3%, 1분위가 17.2%로 앞의 두 변수와 비교할 때 소득 그룹 간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D-index의 경우에도 0.36으로 앞의 두 경우보

다 적게 나타났다.

15차년도 건강분야 기회균등(2012년)

건강 소득분위	1) 현재건강상태		2) 중증+만성질환		3) 질환 치료여부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6456	0.1068	0.0527	0.0910	0.1330	0.0736
1분위	0.3850	0.1382	0.0839	0.1518	0.1723	0.0527
평균	0.5321		0.0644		0.1559	
D-index		0.6882		0.6808		0.3641

②교육 분야의 기회균등은 명문대학의 범위를 달리하여 소득의 차이에 따른 이들 대학으로의 진학여부와 사교육 시장과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격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교육은 우리사회에서 기회균등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을 명문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분위별 진학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 소득 10분위의 경우 예측확률이 1.25%로 나타난 반면 소득 최하위인 1분위에서는 예측확률이 0.26%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무려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index도 기회균등을 평가하는 7개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2.23으로 계산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명문대 진학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 현상이 교육 분야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문대학의 범위를 다소 넓힌 경우에는 기회불평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를 사교육시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할 예측확률은 소득 10분위의 경우 1.77%인데 반하여 소득 1분위는 0.32%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SKY대학 진학의 경우와 비슷한 5.5배에 달했다. 또한 그 결과 D-index도 명문대학의 범위를 넓혀서 계산한 경우 보다 높은 2.24로 나타났다.

15차년도 교육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1) SKY 대학 진학		2)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진학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0125	0.5465	0.0232	0.3522
1분위	0.0026	0.2865	0.0073	0.2301
평균	0.0060		0.0136	
D-index		2.2256		1.5853

소득분위	3)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진학		4) 영어 구사능력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0319	0.2558	0.0177	0.5097
1분위	0.0131	0.1901	0.0032	0.3157
평균	0.0211		0.0088	
D-index		1.2241		2.2431

③안전분야의 기회균등에서는 소득 10분위의 경우 범죄율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이 9.1% 정도로 나타났으나, 소득 1분위에서는 12.9%로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가 낮아짐에 따라(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앞의 건강이나 특히 교육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다. 최상위 소득집단과 최하위 소득집단 간의 예측확률 차이는 약 40% 남짓인데, 이는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D-index도 건강이나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0.50으로 계산되었다.

15차년도 안전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범죄건수 상위10%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0907	0.0732
1분위	0.1292	0.1083
평균	0.1062	
D-index		0.5049

④관계 분야의 기회균등은 소득 10분위 응답자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64.4%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사회적 친분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소득 1분위 응답자가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34.5%로 낮아졌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에서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의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예측확률을 기준으로 도출한 D-index값도 0.81로 교육 분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분야 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15차년도 관계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6346	0.1270
1분위	0.3445	0.1596
평균	0.5061	
D-index		0.8072

⑤ 환경분야의 기회균등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위 10%의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게 될 예측확률로 분석하였다. 소득 10분위의 개인이 오염도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은 9.8%인데 소득 1분위의 개인이 오염도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은 8.9%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예상과는 반대로 오염도 상위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이 고소득층의 경우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이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5차년도 환경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1인당 폐수배출량 상위10%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1000	0.0292
1분위	0.0879	0.0349
평균	0.0945	
D-index		0.1782

⑥ 여가분야의 기회균등에서는 여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는데,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소득 10분위 그룹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은 42%에 달하는데 반하여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소득 1분위 그룹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을 15.9%에 머물렀다. 두 그룹 간의 예측확률 차이는 2.6배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D-index도 1.28로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7개 기회균등 평가 분야 중 가장 높았다.

15차년도 여가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여가 만족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4199	0.2348
1분위	0.1589	0.2220
평균	0.2857	
D-index		1.2789

⑦ 정치분야의 기회균등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별 경험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최상위 소득 10분위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할 예측확률이 12.3%인데 비하여, 최하위 소득 1분위의 경우엔 그 비율이 25.1%로 상승한다.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 간의 차별 경험 가능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

결과 D-index도 1.09로 교육, 관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2014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차별 요인은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의 51.4%).

15차년도 정치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차별경험 유무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1227	0.1323
1분위	0.2514	0.2536
평균	0.1668	
D-index		1.0962

⑧마지막으로 교육, 관계, 여가 분야의 기회균등이 지난 10년 간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5차년도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소득 10분위와 소득 1분위에 속한 개인이 SKY대학에 진학할 예측확률은 각각 1.7%와 0.4%로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예측확률 차이가 약 4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차년도 자료에서 나타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4.8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수준으로 지난 10년 간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수준이 악화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D-index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5차년도의 D-index가 1.87인데 비하여 15차년도의 D-index는 2.23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관계와 여가 분야의 기회균등의 정도는 지난 10년 간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5차년도의 관계분야 소득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예측확률 차이는 1.94배로 15차년도의 1.84배에 비하여 차이가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분야의 D-index도 15차년도의 0.81에 비해서 5차년도에는 0.86으로 지난 10년간 소폭 하락하였다. 여가의 경우에도 D-index를 기준으로 5차년도에 1.42였던 것이 15차년도에는 1.28로 다소 하락하였다.

5차년도 교육, 관계, 여가분야 기회균등(2002년)

교육(SKY 진학)			관계		여가	
소득분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0175	0.4282	0.5067	0.1482	0.2047	0.2496
1분위	0.0044	0.2662	0.2605	0.1668	0.0692	0.2464
평균	0.0094		0.3909		0.1365	
D-index		1.8735		0.8847		1.4207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0-index를 아래 [표 2]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 2] 2012년 우리사회의 기회균등과 0-index

기회균등 분야	Weight	D-index	Weighted D-index
건강	0.212	0.688	0.146
교육	0.130	2.226	0.289
안전	0.187	0.505	0.094
관계	0.099	0.807	0.080
환경	0.091	0.178	0.016
여가	0.047	1.279	0.060
정치	0.088	1.096	0.096
0-index			1.281

VI. 결론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다. 첫째, 기회균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다. 소득과 같은 수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기회균등의 논의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Sen과 Nussbaum의 capability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capability가 기회균등 개념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플랫폼으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의 8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론적으로 도출된 기회균등 8개 영역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정도는 OECD 31개 회원국 중 20위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안전의 기회균등 정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데 비하여 다른 영역, 특히 여가, 정치, 경제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셋째, 우리사회의 영역별 기회균등 정도를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영역별 기회균등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경제 분야를 제외한 7개 영역 중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은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 이외에도 여가와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여가와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가 열악한 것은 국가 간 비교 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문제는 국가 간 비교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서 독립적인 국내 기회균등 분석이 가지는 가치를 잘 보여준다.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I. 기회균등 개념의 이론적 고찰과 평가를 위한 이론틀 제시	3
1. 기회균등 개념의 이론적 고찰: 존 롤즈의 관점에서	3
2. 기회균등의 평가를 위한 이론틀: 마사 너스바움의 관점에서	11
III. 기회균등 지수개발 방법론	18
1.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회균등지수	18
2. 국내 분석을 위한 기회균등지수	24
3. 기존 기회균등 관련 지수들과의 차별성	28
IV.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	34
1. 지표 및 영역별 가중치	34
2. 국가 간 기회균등 비교	36
V.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44
1. 분야별 기회균등 비교	44
2. 종합 기회균등 지수	60
VI. 결론	61
[첨부 1] 국가별 기회균등 영역 점수 분포 - 우리나라와의 비교	63
[참고문헌]	71

〈표 차례〉

[표 1] 영역별 기회균등지수 계산에 활용된 측정지표	23
[표 2] 영역별 지표 가중치	34
[표 3] 국가별 기회균등지수 및 영역별 점수	37
[표 4] 복지국가 유형별 소속국가	38
[표 5] 기회균등 영역별 종속변수	46
[표 6] 분야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47
[표 7] 15차년도 건강분야 기회균등(2012년)	48
[표 8] 15차년도 교육분야 기회균등(2012년)	49
[표 9] 15차년도 안전분야 기회균등(2012년)	52
[표 10] 15차년도 관계분야 기회균등(2012년)	53
[표 11] 15차년도 환경분야 기회균등(2012년)	55
[표 12] 15차년도 여가분야 기회균등(2012년)	56
[표 13] 15차년도 정치분야 기회균등(2012년)	57
[표 14] 5차년도 교육, 관계, 여가분야 기회균등(2002년)	58
[표 15] 7개 기회균등 분야 D-index 요약	59
[표 16] 2012년 우리사회의 기회균등과 O-index	60

〈그림 차례〉

[그림 1] 기회균등지수 산출 방법	19
[그림 2]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회균등지수의 구조	19
[그림 3] D-Index의 개념	26
[그림 4] 영역별 가중치	36
[그림 5] 저발전복지국가유형(type1)과의 비교	38
[그림 6] 동유럽복지국가유형(type2)과의 비교	39
[그림 7] 남유럽복지국가유형(type3)과의 비교	40
[그림 8] 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type4)과의 비교	40
[그림 9] 보수주의복지국가유형(type5)과의 비교	41
[그림 10]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유형(type6)과의 비교	41
[그림 11]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비교	42
[그림 12]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비교	4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기회균등은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주요한 보편적 가치규범이다. 인류사회는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왔다. 봉건제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태생적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에 기초한 사회로, 여성과 타 인종을 배척하는 사회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사회로 변화해 왔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를 기회균등 추구의 역사로 불러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회균등이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추구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가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피케티 열풍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최근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온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보편적인 현상에 주목한다. 피케티에 의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 주요국에서 지난 100년간 소득집중도가 심화되어 소득 상위 1%가 국가 전체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쟁기간 중의 예외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통계청이 고소득층의 소득분포를 보정하여 발표한 신(新)지니계수에 의하면 34개 OECD 회원국 중 6위에 해당될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편이다(한겨레 2013.11.19). 피케티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세습된 부에 의해 지배되는 신(新)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지적은 과거에 비해 현재가 보다 평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로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보는 일반적인 평가와 비교할 때 참으로 아이러니 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회균등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어떤 사회가 기회가 균등한 사회인가? 기회균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인가? 한국은 기회가 균등한 사회로 발전되어 왔는가? 아니면 피케티의 지적처럼 오히려 신분제 계급사회로 퇴보하는가? 기회균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회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기회균등의 이론적 의미를 John Rawls의 정의론과 Amartya Sen의 capability approach를 통해 밝히려고 한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한다. 특히 Sen의 capability approach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거시지수(macro index)와 우리나라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한 미시지수(micro index)의 개발을 시도한다. 셋째, 개발된 기회균등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간 기회균등의 수준을 비교하고 한국의 기회균등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기회균등 연구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 될 수 있다. 첫째, 기존 기회균등지수의 이론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Rawls와 Sen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 기회균등지수를 개발한다. 둘째,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와 국내 분석을 Rawls와 Sen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일관된 이론적 틀 안에서 진행한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나 Rawls의 평등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별 세대별 기회의 구조적 불평등을(한 분야의 불평등이 다른 분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현상) 기회균등지수의 개발에 반영한다.

II. 기회균등 개념의 이론적 고찰과 평가를 위한 이론틀 제시

1. 기회균등 개념의 이론적 고찰: 존 롤즈의 관점에서

1) 기회균등 개념의 이론화

가. 기회균등에 대한 기존 논의

기회균등이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비록 기회균등이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 규범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지라도, 실상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회균등을 이론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회균등이 단순히 불평등의 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회균등의 추구는 절대적인 평등의 추구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기회균등의 가치는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라는 자유주의 가치에 본질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한 기회가 사회에서 제공된 이상,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로 인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용인된다.

위와 같은 전제 아래에 기존의 기회균등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주로 검토되어 왔다. 첫째, 차별금지 원칙이다. 이는 한 사회의 평가시스템이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조직에서 승진대상자를 평가할 때 업무성과와 무관한 성별, 인종, 나이 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의 원칙(주로 성, 인종, 피부색, 성 정체성 등에 기초한 차별 금지 원칙)은 대개의 나라에서 법과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 받고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 외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 받고 있는 이상,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외적 요소를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이 “진정한” 선택, 의지, 노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적 요

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단지 외적 요소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차별금지 원칙을 넘어), 외적 요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때 소수자 우대 정책과 같이 특정 집단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차별금지 원칙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으로서의 기회균등이며, 이를 위해 보다 선제적인(proactive) 정부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원칙으로도 불릴 수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특정 집단과 소외된 계층에게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도 교육의 기회균등으로 이해된다.

이 두 가지 차원의 기회균등 논의는 모두 유의미하다. 실제로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의 노력은 전자에서 후자로 점차 발전해 왔다. 많은 국가에서 형식적인 차별금지 원칙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본 연구도 그러한 맥락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존 논의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는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어느 지점의 기울기가 전체 운동장의 기울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평평한 운동장을 위해서는 어느 지점의 기울기를 조정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진단하여 보다 평평한 운동장, 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 기회균등의 이론화

본 연구는 기회균등을 이론화함에 있어 세 가지 지점에 주목한다. 첫째, 불평등을 기회균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불평등이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진정한”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로 인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으로 용인된다. 그러나 외적 요소의 영향력과 개인의 “진정한” 선택, 의지, 노력을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선 긋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일단은 불평등 현상에 주목해야 할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불평등의 영역을 나눈다. 정의와 평등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대개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 맞춘다. 하지만, 앞서 피케티의 지적처럼,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부에 의해 지배되는 계급 사회로 퇴행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 지속되거나 경

제 영역을 넘어 다른 영역까지 “지배” 하여, 사회적으로 더욱더 공고한 계급사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평등 현상에 주목한다.

셋째,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얼마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인지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보이는 불평등 현상이 얼마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달려있다는 점이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피케티의 지적처럼, 특정 가치에 의해 개인의 종합적 지위가 결정되는 지배구조를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피케티는 자본의 가치에 의해 종속되어 계급화된 사회를 비판한다. 따라서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 분야의 불평등이 다른 분야의 불평등과 어떤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지, 그리고 한 분야의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적 불평등의 수평적·수직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불평등에 관한 위의 세 가지 지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회균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회균등의 기준과 지표개발을 위한 이론적 단초는 John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논의와 Amartya Sen/Martha Nussbaum의 capability approach에서 빌려 오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Rawls와 Sen/Nussbaum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Rawls와 Sen/Nussbaum은 소위 자유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학자군에 속한다. 즉, 이들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와 선택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다. Rawls의 경우 『정의론』에서 기회균등을 정의의 원리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한다. 정의의 원리는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기본권 보장과 유사하다. 제2원리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허용되는 두 가지 조건으로 공정한 기회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과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로 구성된다. 두 번째 원리의 첫 번째 조건으로 기회균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Sen/Nussbaum 역시도 capability approach에서 capability란 바로 자유라고 직언한다.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substantial) 자유가 바로 capability이며, 이러한 자유가 바로 기회균등이다. 둘째, 이들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Rawls와 Sen/Nussbaum 모두 불평등 문제에 크게 주목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논점은 앞서 언급한 ‘기회균등의 이론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다.

다. Rawls와 기회균등

일반적으로 Rawls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egalitarian liberalist)라고 불린다. Rawls가 자유주의자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어떤 점에서 Rawls에게 ‘평등주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가? 여기에서는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논의의 모든 부분을 다루지 않으며, 다만 기회균등과 불평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Rawls의 정의 논의의 일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¹⁾ Rawls의 정의론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불평등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Rawls가 모든 불평등이 잘못되고 부정의한 것이라고 간주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결과의 평등을 지지한 것도 아니다. Rawls에게 평등은 공정한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가치이며, 따라서 여기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Rawls는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력체(society as a fair system of cooperation)로 상정한다. 이 사회는 정의의 원리로 운영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이며, 정의의 원리로 운영되는 이러한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이다. 정의의 원리는 가상의 원초적 상태의 무지의 베일에서 선택된 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에, 보다 정확하게는 사회의 기본구조(기본구조란 헌법과 주요한 경제·사회제도를 포함한다)의 기본 운영원리로서 적용되며, 이러한 적용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사회적 협력의 결과물을 나누는 분배의 원칙이 구체화된다. 정의의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JF § 13, Theory § 11- § 14).

- 첫째, 각 개인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
-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a) 그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지위와 직책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b) 그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차등의 원리).

위의 두 가지 정의의 원리는 다음의 네 가지 원리로 구체화 될 수 있다.

1)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불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추구되는 정치적 정의에 관한 논의이다. 전자는 『정의론』에서 후자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논의에 초점 맞춘다.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논의는 이후에 출판된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논의』에서 수정·보완되어서 서술되고 있다. 이 글에서 Rawls의 저서를 참고할 때, 『정의론』은 Theory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PL로,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논의』는 JF로 표시하겠다.

- 제1원리 - ①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
- ②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원리
- 제2원리 - ③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 ④차등의 원리

제1원리와 제2원리 간에는 우선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한다는 것인데, 제1원리가 만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제2원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제2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좁은 의미의 분배의 원칙)과 관계하는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대상으로 한 원리인 ③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④차등의 원리는 ①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와 ②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원리가 만족되었을 때 작동된다. 이러한 네 가지 원리는 Rawls가 상정한 공정한 사회, 즉 기회균등한 사회를 규정한다.

제1원리의 ①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는 헌법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①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란, 공정한 사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사회는 헌법적 가치로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 등을 보장한다. 공정한 사회의 제1원리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JF § 13).

헌법적 가치로서 간주되는 다양한 기본권은 모두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 정치적 자유는 여타 기본권과 구별되게 다른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Rawls는 주장한다. 오직 정치적 자유만이 ‘공정한 가치(fair value)’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것이 ②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원리이다. 정치적 자유가 공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정치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 시민들이 정책형성과 정치참여에 있어 동등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즉, ②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 원리의 핵심은 시민들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Rawls가 경계한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면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을 낳게 되고, 정치적 불평등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공고히 하게 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하고 제어함으로써, 사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이러한 불평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나 제2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으며 조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Rawls는 보았다) 이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정치적 자유는 정치적 평등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정치적 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하는 사회의 기본 제도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부와 자본의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정치적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JF § 42).

제2원리의 ③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공정한”(fair)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awls는 자신의 저작에서 기회균등의 의미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형식적(formal) 기회균등과 차별화시켜 그 의미를 부각시킨다. ‘공정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형식적’을 넘어서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롤스에게 형식적 기회균등이란 자유의 일반적 체계(system of natural liberty)에 따라 기회(open door)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유의 일반적 체계란 자유의 이름으로 능력주의(성과주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의해 그 성과를 인정받는 체계이다. 그러나 Rawls에게 이러한 기회균등의 문제점은, 재능과 능력의 경쟁체계 속에서 개인이 속한 경제적 지위나 가족 환경이 그 경쟁체계에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친구와 나는 비슷한 고교 성적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부유한 내 친구는 비싼 사교육의 영향으로 수능점수를 높여 일류 대학에 들어갔으며, 집안이 가난한 나는 등록금을 제공하는 내 수능 점수대보다도 낮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경쟁체계는 단지 형식적 기회균등인 셈이다.

따라서 Rawls에게 공정한 기회균등이란 형식적 기회균등의 “문제점을 교정한(correct the defects)”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은 공적 직위나 사회적 직책이 형식적 의미에 기초하여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것을 넘어선다. 모든 사람에게 공적 지위나 사회적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같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이들이 특정 직책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태생적 지위나 가족 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형식적 기회균등을 자유의 일반적 체계라고 칭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을 ‘자유적 평등(liberal equality)’이라고 칭한다. Rawls에게 능력주의(성과주의)에 기초한 자유시장제도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전제하지 않기에 그 자체로 공정하지 않다.(제1원리를 통해서도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 의미의, 즉 공정한 기회균등은 제1원리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자유시장제도가 낳은 사회경제적 불

평등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형식적이 아닌 공정한 기회균등이 제시되었을 경우만 정당화된다(JF § 13, Theory § 12 & § 14).

제2원리의 두 번째인 ④차등의 원리는 제1원리가 만족되었을 때, 그리고 제2원리의 ③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만족된 경우에, 즉 이러한 원리들이 사회제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을 경우에 (Rawls는 이를 정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한하여 작동된다. 차등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재)분배의 원리로 인식된다.²⁾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조정, 즉 부유한 이의 부가 가난한 이에게 정당하게 재분배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차등의 원리가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의 부와 소득 수준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이다. 이러한 차등의 원리는 개인의 재능과 능력(Rawls는 이를 개인의 내적 자원 natural assets이라고 표현한다) 마저도 그 자체로 운과 같은 우연적 요소(contingencies)와 필연적으로 관련됨을 직시한다. 예를 들어, 김연아가 얻은 부는 그녀의 재능이 낳은 결과이지만, 동시에 김연아의 재능을 가치 있게 알아본 사회의 결과로 함께 상정함으로써 온전히 그녀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이 점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 운이 좋아 시장성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자는 재능을 통해 얻는 부를 가질 도덕적 자격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운이 나빠 시장성 있는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재능의 부재로 인한 가난을 겪을 도덕적 자격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어떤 이가 자신의 부를 소유할 자격이 온전히 있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이도 자신의 빈곤을 자신이 책임질 자격이 온전히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리는 태생적 재능의 분배는 공동의 자산(common assets)으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태생적 재능 자체가 공동의 자산이라기보다 그 분배가 (어떤 이는 시장성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다른 이는 시장성이 없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Theory § 17 & § 21, JF § 36).

Rawls의 이러한 차등의 원리(재분배의 원리)는 시장을 조정함으로써(보다 정확하게는, 시장의 결과물을 (재)분배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된다. 엄격히 말해, 부유한 이로부터 가난한 이로 이동되는 부의 분배는 “재” 분배가 아니다. 시장에 의해 야기된 잘못된 분배를 바로 잡는 교정의 역할을 하는 분배, 즉 원래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분배이며, 또한 이는 결과를 바로 잡는 분배라기보다 기본구조를 통해 불평등한 시작점을 바로 잡는 기

2) 이는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Rawls의 두 가지 정의의 원리 모두가 사회적 재화(social goods)에 대한 분배원리를 담고 있다.

회균등의 조건으로서 역할하는 분배이다. 결론적으로 제2원리는 ③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④차등의 원리로 나눌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말해, ④차등의 원리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Rawls에게 공정한 사회는 정의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이며, 이는 곧 기회균등의 사회이다. 기회균등은 정의의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보장된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되었을 때이다. 둘째는, 우연적 요소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때이다. 이는 계속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이를 끝임 없이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함으로써 그 불평등의 영향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을 함께 형성한다.

따라서 Rawls에게 기회균등한 사회는 첫째, 헌법적 원리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이며, 둘째, 사회경제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주목하고 조정하는 사회이다. 이는 모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자유시장제도에 의해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호혜성의 원칙(혹은 차등의 원리)에 의해 최소 수혜자를 위해 재분배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가지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야기되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사회에서의 특정한 지위가 공고화되고 재생산되어 종속과 지배로 변모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Rawls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앞서 언급한 기회균등 이론화를 위해 다음의 기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모든 불평등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된 불평등과 잘못된 불평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불평등 현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Rawls는 지적한다. 둘째, 가장 주목받는 무엇보다도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일 것이다. 그러나 Rawls의 지적처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부에 의해 지배되는 부정의한 사회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셋째, Rawls가 언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과의 연계는, 결국 우연적 요소에 의해 종속되어 계급화된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2. 기회균등의 평가를 위한 이론틀: 마사 너스바움의 관점에서

1) Sen/Nussbaum과 기회균등

앞서 언급한 Rawls의 『정의론』이 평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면, 『정의론』 이후 대두된 새로운 화두는 단연코 ‘무엇의 평등?(Equality of What?)’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규범임이 Rawls의 『정의론』을 통해서 분명해졌다면, 그 다음 논의 주제는 무엇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였다.³⁾ 이것이 바로 1980년대에 유행한 ‘무엇의 평등?’ 논쟁의 배경이다. Ronald Dworkin, Richard Arneson, G. A. Cohen, Amartya Sen 등이 이 논쟁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들은 무엇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Dworkin은 자원(resource)을 평등한 분배의 대상이라 지적하였고, Arneson은 선호의 만족(preference satisfaction), 즉 복지(welfare)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workin이 주장하는 자원평등(resource-based equality)과 Arneson이 주장하는 복지평등(welfare-based equality)과는 달리, Sen은 capability 평등(capabilities-based equality)을 주장하였다. 이곳이 바로 capability와 평등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Sen에 따르면 평등한 분배의 대상은 자원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capability라고 답한다. capability란 개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혹은 될 수 있는(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⁴⁾ 따라서 평등/불평등을 비교하고 측정하는 대상은 개인이 가진 자원이나 부의 양도 아니며,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바로 capability라는 것이다.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개인이 가진 실질적인 자유를 뜻한다. capability는 자유이자 선택이다. “선택의 자유”가 capabilities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 capabilities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가치에 기초에 두기 때문에, 이는 결과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functionings와 capabilities의 비교는 의미있다. 보통 ‘기능’으로 해석되는 functionings는 capabilities가 성취된(달성된) 상태이다. functionings는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 capabilities는 기회를 뜻한다. 따라서 capabilities

3) Equality of What? 이외에도 함께 대두된 다른 논쟁으로는 Equality of How?와 Equality of Whom? 등이 있다. Equality of What?이 무엇을 분배하는지의 분배되는 대상에 관한 논쟁이라면, Equality of How?은 어떻게 분배하는지의 분배 방식에 관한 논쟁이며, Equality of Whom?은 누구에게 분배하는지의 분배받는 사람에 대한 논쟁이다.

4) capabilities에 대한 다양한 국어 번역이 존재한다. ‘역량,’ ‘능력,’ ‘가능성’ 등이다. 개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capabilities의 의미에 충실하자면, 그리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개인 내적인 요소와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를 함께 뒷받침해 줌으로써 담보될 수 있는 것이라면, capabilities에 가장 적절한 국어 번역은 ‘가능성’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approach는 개인에게 일련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이는 개인에게 일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기회)(capabilities to functioning)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한 삶의 가치와 (종교적 혹은 윤리적이 될 수 있는)목적에 근거해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거듭 언급하지만,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개인이 가진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하며, 동시에 이는 실질적인 기회를 뜻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기회와 자유, 즉 capability가 평등/불평등의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Sen은 주장한다. 이 점에서 capability 평등은 기회균등과 같은 의미이다. 더 나아가 capability는 개인 삶의 질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기준으로서도 언급되며, capability approach란 이러한 입장을 총칭한다.

또한 capability는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로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다원적이다. capability는 하나의 측정 기준에 의해서 비교되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한다는 것도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다(Nussbaum 2011, 18).

Sen은 capabilities를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등/불평등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긴 반면, Nussbaum은 국가가 보호하고 담보해야 할 인간이라면 갖춰야 하는 최소한 수준의 capabilities에 초점 맞춘다. Nussbaum은 이를 기본의 사회정의(basic social justice)라고 칭하며(Nussbaum 2011, 40), 어떤 문화와 정치 공동체도 합의할 수 있는, 즉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충실한 10개 핵심 capabilities의 리스트를 제시하였다(Nussbaum 2000, 78-80, 2011, 33-34).⁵⁾

- 10가지 핵심 capabilities

①생명(life): 단명하지 않고 적어도 평균수명 정도를 살 수 있는 capability이다.

②신체건강(bodily health):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충분한 영양을 취

5) 이에 반해 Sen은 보편적인 capabilities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capabilities 중에서 그 중요도의 경중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Nussbaum처럼 핵심 capabilities의 리스트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Sen은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및 정치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놓고자 하였다. 그 결과 Sen은 capabilities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공적 토론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한다. Sen과 Nussbaum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Nussbaum(2000, 12-14, 2011, 71-76) 참조. 이러한 차이에 근거해서 Nussbaum은 자신의 capabilities approach를 규범측면의 버전(normative version)으로, 반면 Sen의 capabilities approach를 비교측면의 버전(comparative version)으로 설명한다.

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한 거주지를 갖추고,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③신체무결(bodily integrity): 이는 주로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유와 자결권을 의미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capability, 성폭행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과 폭행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 capability,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capability, 그리고 선택에 의해 임신을 종결할 수 있는 capability를 포함한다.

④감각, 상상, 사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각, 상상, 사유, 논리를 향유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이는 개인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로 볼 수 있으며, 물론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영역에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표현과 숙고,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의 능력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고 훈육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⑤감정(emotions): 타인과 사물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가질 수 있는 capability이다.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슬퍼하고, 갈망하고, 감사하고, 분노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공포와 근심으로 인해 이러한 감정이 생성되지 못하고 표출되지 못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감정의 capability는 개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함께 증진될 수 있다

⑥실천이성(practical reason): 개인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실천이성 capability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존되었을 때 담보될 수 있다.

⑦관계(affiliation): 관계 capability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포함된다. 하나는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사회에 대해 정의감과 우애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capability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구성하고 장려하는 제도가 함께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중되고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capability이다. 이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종/성/성적지

향/종교/계급/종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capability이다.

⑧다른 종(other species): 동식물, 자연과 함께 살고 관계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⑨놀이(play): 즐겁게 놀고, 웃고, 기분 전환을 위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⑩환경에 대한 통제(environmental control): 이 capability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이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 미치는 정치적 선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이는 정치참여의 권리를 갖는 것, 결과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함께 전제한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측면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이는 타인과의 평등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며, 타인과의 평등한 관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당한 압수 및 몰수를 당하지 않는 자유도 포함된다. 시장에서 일함에 있어,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본인의 실천이성을 발현하며, 다른 노동자와 상호인정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핵심 capabilities는 인간 삶의 다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경제 영역은 인간 삶의 단지 한 부분일 뿐이다. 경제 영역은 10번째 핵심 capabilities인 환경에 대한 통제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이들 10가지 영역은 상호 관련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 영역 간 서로 “구별되는(distinctive)”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개별 영역이 모두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한다(Nussbaum 2011, 35).

한편으로 핵심 capabilities의 10가지 영역이 모두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capabilities는 특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계나 실천이성의 경우, 다른 capabilities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Nussbaum은 이를 architectonic role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예로, 어떤 capabilities의 존재는 여타 capabilities를 증진시키는데 보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capabilities의 부재는 여타 capabilities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Nussbaum은 전자를 “fertile”로 표현하고, 후자를 “corrosive disadvantage”로 표현했다). 모든 capabilities가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서는 다른 capabilities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반면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매개 capabilities를 찾아내고 구분하는 작업은 정부가 어떤 부분에게 개입해야하는지에 관한 “공공정책이

개입해야하는 최적의 지점(best intervention points for public policy)” 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Nussbaum 2011, 44-45).

2) Rawls와 Sen/Nussbaum의 기여

기회균등 개념화를 위한 Rawls의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언급될 수 있다. 첫째, 불평등을 기회균등을 진단하는 기초적인 척도로 삼고자 한다. 둘째,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불평등의 영역을 나눈다. 셋째,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Sen/Nussbaum의 capability approach를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한 불평등 영역을 구체화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는 기회균등 지표의 개발과 평가에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기반으로 이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Nussbaum의 capability 10가지 영역을 재구성하여 다음의 8개 영역으로 간추렸다. 기존의 10개 영역은 ①생명, ②신체건강, ③신체무결, ④감각, 상상, 사유, ⑤감정, ⑥실천이성, ⑦관계, ⑧다른 중, ⑨놀이, ⑩환경통제이다. 재구성한 8개 영역은 (a)생명/건강, (b)안전, (c)환경, (d)경제, (e)교육, (f)관계, (g)여가, (h)정치참여이다.

[Nussbaum 10개 영역]		[재구성한 8개 영역]
①생명	→	(a)생명/건강
②신체건강	↗	
③신체무결	→	(b)안전
④감각, 상상, 사유	→	(e)교육
⑤감정	↗	
⑥실천이성	↗	
⑦관계	→	(f)관계
⑧다른 중	→	(c)환경
⑨놀이	→	(g)여가
⑩환경통제	→	(d)경제
	↘	(h)정치참여

재구성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Nussbaum의 틀을 존중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d)경제와 (h)정치참여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라기보다 Nussbaum의 환경통제의 속한 물질적 통제와 정치참여를 두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Nussbaum의 생명과 신체건강은 (a)생명/건강의 하나의 영역으로 묶었다. 놀이는 (g)여가로 표현했다.

둘째, 지표 개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신체무결은 (b)안전의 영역으로, 감각, 상상, 사유, 감정, 실천이성의 세 영역은 포괄적으로 (e)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중은 동·식물과 관련됨으로 (c)환경의 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

셋째, 물론 이러한 8개 영역이 불평등을 측정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간과하는 것을 아니지만, 추후에 진행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8개 영역을 basic capabilities((a)생명/건강, (b)안전, (c)환경, (d)경제)와 advanced capabilities((e)교육, (f)관계, (g)여가, (h)정치참여)로 나누었다. 이것이 이들 capabilities 간에 위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지만, advanced capabilities는 basic capabilities의 기반 하에 발전된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용이하다. 그러나 basic과 advanced의 구분은 너스바움이 핵심 capabilities를 basic, internal, combined로 나눈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Nussbaum 2000, 78-86).

재구성된 capabilities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asic capabilities>

a. 생명/건강: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역량이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반적 수명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해당된다. 의료시스템의 미비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 수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일찍 죽거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아 태아의 낙태율이 높다면 생명/건강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영양을 취할 수 있는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거주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생명/건강 역량에 포함된다.

b. 안전: Nussbaum의 언어로 신체무결(bodily integrity)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를 안전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했다. 주로 인간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 성폭행,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행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성적 자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성적 만족과 재생산과 관련되어 피임을 할 수 있는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포함된다.

c. 환경: 이 영역은 Nussbaum의 다른 종(other species)을 재구성하였다. Nussbaum에게 다른 종이란 동식물과 자연을 포함하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는 환경이라고 칭했다. 개인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환경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 환경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가 포함된다.

d. 경제: 이 영역은 Nussbaum의 정치와 경제로 세분화된 환경 통제에서 경제부분에 해당된다. 이 영역의 capability는 실질적인 기회로서의 소유권을 갖는지가 해당된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으로, 자유시장제도 내에서의 소유권 개념을 넘어선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을 구할 역량도 포함된다.

<advanced capabilities>

e. 교육: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문자를 해독하고 기초 수학과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영역에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표현과 숙고,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의 능력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고 훈육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f. 관계: 이 영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capability이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과 사회에 대해 정의감과 우애를 기를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을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중되고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capability이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인종/성/성적지향/종교/계급/종족 등의 이유로 차별 받는지도 관련된다.

g. 여가: 즐겁게 놀고, 웃고, 기분 전환을 위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basic capabilities로 언급한 생명/건강, 안전, 경제 등의 역량이 전제 된다면 여가에 대한 역량이 보다 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h. 정치참여: 이 영역은 Nussbaum의 환경 통제 영역 중 정치부분에 해당된다. 인간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capability이며, 이는 보다 포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소득이나 성별, 출신성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정치적 자유의 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보장과 더불어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Ⅲ. 기회균등 지수개발 방법론

1.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회균등지수

1) 지수 산출의 두 가지 접근

지수의 산출은 관찰하려고 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고도로 단순화되고 객관화 된 하나의 수치에 담아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사회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들을 모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첫째, 관찰하려고 하는 사회현상을 직접 관찰이 어려운 현상으로 가정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수의 지표를 활용하여 지수를 도출하는 일종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 관찰하려고 하는 사회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지표로 활용하여 지수를 도출하는 일종의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접근에 바탕을 두고 기회균등지수를 산출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절에서 서술한다.

2) 기회균등지수 산출 방법

본 연구는 앞 장에서 도출된 8개의 기회균등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야별 및 종합 기회균등지수를 도출하였다.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capability approach를 토대로 기회균등의 대상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건강-안전-교육-관계-환경-여가-정치-경제로 구성된 8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영역별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결과지표와 투입지표를 구분하고 결과지표를 종속변수로 투입지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기존 기회균등 관련 지수들은 흔히 투입에 해당하는 지표와 결과에 해당하는 지표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지수를 도출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최종지수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의 문제, 즉 지수의 개념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투입과 결과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기회균등 지수를 도출한다. 특히 결과지표의 경우엔 기회균등이 성취되거나 결여된 상태, 즉 분야별 기회균등의 결과와 투입지표의 경우엔 기회균등 현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

성한다. 기회균등이라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결과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한 결과지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회균등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입지표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야별 기회균등 현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기회균등지수 산출 방법



[그림 2]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회균등지수의 구조



세 번째는 영역별 기회균등지수 계산이다. 투입지표와 결과지표가 결정이 되면 각 영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영역별 기회균등지수를 계산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첫째, 투입지표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출하기 위하여 투입지표를 독립변수로 결과지표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산출지표는 혼치 않으므로 한 가지만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투입지표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로 활용된다. 둘째, 이를 위하여 먼저 단위가 다른 투입지표들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각 지표의 z 점수를 계산한 뒤 이를 다시 0부터 1까지로 표준화한 값으로 변환하고, 이렇게 해서 표준화 된 지표들에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합산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지표들의 합산값을 마지막으로 다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다시 표준화한다. 마지막 단계의 표준화 작업은 분야별 기회균등 지수의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적용된다. 분야별 회귀식에 활용되는 독립변수의 숫자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의 표준화를 거치지 않으면 독립변수의 숫자가 많은 분야일수록 기회균등 지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산된 표준화된 투입지표의 합을 표준화된 산출지표와 통합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수는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투입지표의 합을, 내용타당성은 높지만 제한적인 산출지표와 통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회균등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 단 투입지표의 합과 산출지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으로는 산출지표가 반영하는 분야별 기회균등 정도를 제외한 부분을 투입지표의 합에 가중치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가중치는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된 가중치의 사용으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단순하게 1:1의 비중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식(1)을 통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식 (1)에서 O_i 는 분야 i 의 기회균등지수를, p_{ij} 는 분야 i 의 산출지수를, 그리고 w_{ij} 와 k_{ij} 는 분야 i 의 표준화된 투입지표 j 가 가지는 가중치와(회귀분석에서 도출) 정규화된 값을 의미한다. 만일 독립변수 중 결측값이 있어서 값의 산출이 가능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은 종속변수의 표준화된 값만을 넣어서 기회균등 값으로 활용하였다.

$$O_i = Standardize(p_{ij}) + Standardize(\sum_j w_{ij}k_{ij}) \quad (1)$$

네 번째 단계는 영역별 지수를 통합하기 위한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8개의 영역을 통합하여 국가별로 단일한 기회균등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을 통합할 때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기회균등의 분야별 가중치의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 기회균등 지수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또한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표별 분야별 가중치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거나 자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회균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초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분야별 가중치를 도출한다. 이 기법에서는 8가지 영역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서 각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얼마나 더 중요성을 가지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영역별 중요성을 계산한다. 국가수준의 기회균등지수는 식 (2)를 통해 얻어지는데, Π 는 국가별로 도출된 최종 기회균등지수를 의미하고 r_i 와 O_i 는 각각 분야 i 의 가중치와 기회균등지수를 의미한다.

$$\Pi = \sum_i \gamma_i o_i \quad (2)$$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회균등 관련 사회과학 및 법학 전문가들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응답 중 일관성 수준의 유의도가 0.2를 넘지 않는 34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앞서 계산된 각 영역별 기회균등지수를 (2)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최종 기회균등지수를 계산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를 활용하여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 31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기회균등 정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행한다. 국가 간 비교 대상을 OECD 국가로 한정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 capability의 분야를 논의하는데 있어 가급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산업화된 나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Nussbaum의 리스트가 보편적 capability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Sen이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수준이라는 맥락에 따라 각 분야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분야별 지표 수집에 있어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OECD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3) 기회균등 분야별 측정 지표

본 연구에서 기회균등지수 산출을 위해서 8가지 영역에 사용된 투입지표와 산출지표 그리고 각 지표의 설명과 출처는 [표 1]과 같다.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투입지표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각 영역당 기회균등 결과지표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수준(1인당 GDP)과 사회의 불평등 수준(GINI 계수)은 모든 영역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경제수준은 절대적 기회균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 기회균등에 영향력을 가진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이 두 변수는 단순히 통제변수로 사용된 것을 넘어서 실제 투입변수의 영향력을 합산할 때도 사용되었다. 각 변수는 2011년 혹은 2011년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수치를 활용하였다.

건강에서는 공통적인 통제변수 이외에 건강정책, 전체 보건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천명당 의사의 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결과변

수는 30세부터 70세까지의 사망률로 상정하였다. 건강에 대한 결과 혹은 성과변수로는 유아사망률이나 평균수명 등이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OECD 국가에 유아사망률은 대체로 상당히 낮아져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변수가 되었으며, 평균수명 역시 건강의 기회균등을 보여주기에는 제한된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서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이 일반적으로 70을 넘었기 때문에, 평균수명 이전의 사망률은 기회균등을 반영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한 의미에서 결과변수로 채택이 되었다.

안전에서는 십만명 당 고의적 살인의 수(intentional homicides)를 결과변수로 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지지네트워크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통합정책, 공격을 받은 횟수가 투입지표로 활용되었다. 교육은 PISA 점수를 결과지표⁶⁾로 하였으며, 교육정책, 아동빈곤율, 공공교육비지출, 가족정책, 그리고 선생님 당 학생 수를 투입지표로 사용하였다. 관계는 개인 간의 안전과 신뢰에 대한 인지수준을 결과지표로 하며, 이에 대한 투입지표는 자원봉사 시간, 낯선 이에 대한 도움여부, 사회통합정책, 그리고 밤거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하였다.

환경은 물의 질(water quality)을 결과지표로 하고, 환경정책, 하수처리수준, 그리고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투입지표로 하였다. 물의 질 역시 환경의 기회균등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지만, 환경 관련 비교 가능한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채택하였다. 여가의 경우 반대적 의미는 노동시간을 가지고 결과지표를 측정하였다. 여가의 경우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지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노동시간이 길 경우 여가가 짧아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여가에 관련된 적절한 요인을 찾지 못하여 노동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비중, 빈곤율, 사회복지지출을 영향요인을 설정하였다. 정치의 경우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지수를 결과지표로 하였으며, 언론자유, 정부의 부패인식, 시민참여수준, 비차별적 태도 등을 투입지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는 빈곤율 결과지표로 하였으며, 사회통합정책, 실업률,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시간제 근로를 투입지표로 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6) 연구과정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제비교 지표는 초등학교중퇴율(school drop rate)이 있다. 하지만, 건강에서 유아사망률과 유사하게 OECD 국가에서 초등학교중퇴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서 변별력이 낮다. 공교육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학교육에서 공공지출의 비중 역시 고려 되었다. 그러나 이 변수들 역시 채택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 변수들이 성과보다는 투입변수라는 점이다. 둘째, 이 변수들을 성과변수로 채택하게 되면 공공지출이 높으면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PISA 점수의 경우 수월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높은 PISA 점수는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읽기, 수학, 과학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비록 높은 교육이 얼마나 사회적 성공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교육수준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채택되었다.

8가지 영역의 결과지표는 정확히 ‘기회균등’ 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기회균등은 각 사회에서 보이는 기회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표는 총량적 지표이며 평균을 내포하고 있는 지표이다. 그러한 점에서 결과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비교에서는 각 국 내의 기회차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지표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총량적인 평균지표이지만 사망률이나 고의적 살인 비중, 빈곤율 등 그 지표가 낮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안전 혹은 경제생활에서 기회가 더 박탈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지표를 사용하였다.

[표 1] 영역별 기회균등지수 계산에 활용된 측정지표

Capability	측정지표	자료출처
건강	Mortality rate(ages 30-70, per100,000)_2008	UN data
	Health policy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Private expenditure on health(%) as total_2011	UN data
	Medical doctors per1,000_2011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안전	Intentional homicides(per100,000)_2011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Social inclusion policy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Quality of support network_2013	OECD Better life index
	Confidence in police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교육	Assault rate_2010	OECD Better life index
	PISA score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Education policy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Age 0-17 poverty rate_2011	OECD Income Distribution DB
	Public education expenditure(%)_2011	OECD Social Expenditure DB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_2012	OECD Education and Training DB
관계	Family policy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Internal safety and trust_2010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Volunteered time(%)_2010	Gallup
	Helped a stranger(%)_2010	Gallup
	Social inclusion policy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환경	Differences in feeling of safety at night_2012	OECD Soc at a glance 2014
	Water Quality_2010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Waste water treatment_2010	OECD Environment Statistics
	Environmental Policy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여가	Access to Sanitation_2011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Average annual hours worked_2011	OECD Productivity DB
	Part-time employment rate_2011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_2011	OECD Income Distribution DB
정치	Social expenditure_In percentage of GDP_2011	OECD Social Expenditure DB
	Freedom house index_2011	Freedom house
	Media freedom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Corruption perception index_2011	Transparency international
	Civic activism_2010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Non-discrimination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경제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_2011	OECD Income Distribution DB
	Social inclusion policy_2011	Sustainable Governance Index
	Unemployment rate_2011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Social expenditure_In percentage of GDP_2011	OECD Social Expenditure DB
	Part-time employment rate_2011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통제변수	GINI coefficient_2011	OECD Income Distribution DB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 영역별 첫 번째 변수(음영처리)가 종속변수로 사용된 산출지표임

※표 하단의 통제변수는 8개 분야의 분석에 모두 포함되었음

2. 국내 분석을 위한 기회균등지수

1) 국가 간 비교 지수와의 차별화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현황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우선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라는 거시분석과 동일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회균등 현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을 동일한 이론적 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본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회균등 및 불평등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맥락을 고려한 국가 간 비교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기회균등의 한 영역인 교육 분야를 예로 들어 보자. 국가 간 비교에서는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산출지표로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을 사용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최저 71.3%(이태리)에서 최고 100%(스위스)까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98.0%로 거의 대부분 국민이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교육 기회균등 내지는 교육격차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수준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선 주로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어구사 능력이나 명문대학 진학률과 같은 보다 세밀하고 우리 사회의 맥락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지표의 사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 분석과 동일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되 좀더 정교한 산출 중심의 미시지표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회균등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및 종합 기회균등 지수 도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맥락을 고려한 세부지표의 활용은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Sen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2) 분야별 기회균등 분석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이다. Rawls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불평등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분야의 불평등이 다른 분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한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구조화된 불평등이다. 따라서 기회균등을 논함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기회균등 연구는 바로 구조적 측면의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기회균등지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야별 세대별 불평등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기회균등지수의 개발을 시도한다.

분야별로 연관된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 기회균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선 8개 역량 영역 중 다른 영역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끼칠만한 영역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회균등지수는 선정된 기준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평등이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경제 분야의 불평등을 다른 분야의 기회균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의 15차년도 자료(2012년)를 기준으로 가구총소득(임금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를 구분하였다. 다만 여기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에 가구원들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모든 가구원이 동일한 가구총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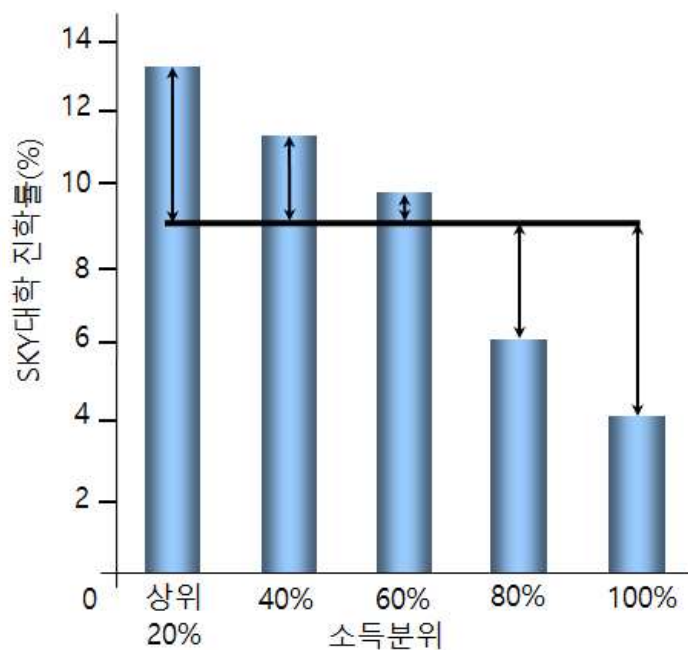
가. 분야별 기회균등 지수의 도출: D-Index

본 연구는 분야별 기회균등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국가별 기회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ndex를 활용한다. D-index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 정도를 그룹별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dissimilarity measure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을 소

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나누고 소득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에 진학할 예상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계산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명문대 진학률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하면 우리사회의 소득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은 D-index의 개념을 도식화 한 것이다. 중앙의 수평선은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의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 명문대 진학률을 의미하고 다섯 개의 막대그래프는 가계소득 상위 20%에서 소득 하위 20%까지 각 그룹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예상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상확률의 도출은 개인의 소득 이외에 나이, 성별, 부모학력 등의 개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래 식 (3)에서 전체 평균확률(P_{bar})과 그룹별 확률(P_i)의 차이는 나이, 성별 등의 개인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 가계소득에 따른 명문대 진학 기회의 차이, 즉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그림 3] D-Index의 개념



좀 더 구체적으로 D-index의 도출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 변수로는 평가 대상이 되는 capability 영역의 기회균등 정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명문대 진학여부와 같은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는 가계소득, 부모의 학력, 성별 등과 같은 환경변수를 사용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한다. 둘째, 추정된 회귀식을 바탕으로 가계소득 계층별로 명문대 진학의 predicted probability를 계산한다(이 때 가계소득 규모만 변화시키고 다른 변수들

의 값은 그룹 전체의 평균값으로 통제함). 셋째, 계산된 그룹별 predicted probability를 바탕으로 식 (3)을 통해 교육분야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D-index를 계산한다(Barros et al., 2009).

$$D = \frac{1}{2P} \sum_i^n |P_i - \bar{P}| \quad (3)$$

만약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가계소득의 수준에 따라 명문대 진학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D-index는 0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명문대 진학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큰 D-index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D-index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분야별 연관성을 고려한 기회균등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의 예는 경제적 측면과 다른 분야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분야별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주지만 유사한 분석을 교육이나 건강 분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연관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기회균등의 분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과 부모의 교육정도를 고려했을 때 자녀의 명문대 진학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5등급의 소득 구분과 3등급의 부모 교육수준 구분을 가정하면 15개 그룹이 만들어지고 각 그룹의 명문대 진학에 대한 predicted probability를 계산함), 이를 통해 소득과 교육 그리고 세대 간 연관성을 고려한 기회균등 지수의 도출이 가능해진다.

나. 전체 기회균등 지수의 도출: 소득 기준 O-Index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기회균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명문대 진학률이나 영어구사수준, 건강수준,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만족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소득 기준 기회균등의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득 기준 기회균등 지수 O-index는 식 (4)와 같이 계산한다.

$$O = \sum_i w_i D_i \quad (4)$$

식 (4)에서 D_i 는 각 분야별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D-index이고 w_i 는 AHP분석을 통해 도출될 분야별 가중치이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O-index는 기회

균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8개 영역 중 연관성 기준으로 사용된 소득을 제외한 7개 영역의 종합적인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준다.

3) 노동패널 소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 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12,000여명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로 작성되는 자료이다. 현재 1차년도(1998년)부터 15차년도(2012년)까지의 데이터가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http://www.kli.re.kr/klips/ko/main/main.jsp>)에 공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소득, 건강, 교육, 사회관계 등 Nussbaum의 capability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설문결과를 담고 있다. 교육 분야를 예로 들자면 과목별로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은 무엇인지,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과 같이 질문의 범위가 매우 넓은 뿐 아니라 매우 상세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n개의 기회균등 영역이 개인 수준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부터 자료가 축적되어 불평등 구조의 변화와 같은 중단분석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기존 기회균등 관련 지수들과의 차별성

1) 기존 지수들의 소개

기회균등은 사회과학과 공공정책에서 중요한 개념이자 목표로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기회균등을 체계적으로 측정된 시도들은 많지 않다. 기회균등이 이론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연구에서 단선적으로 측정된 기회균등이 사용되었다. 국내외의 다양한 설문조사 연구에서 우리 교육이나 취업 혹은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한 문항으로 직접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에서 본인과 부모와의 직업비교나 개인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기회균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한 사회의 단면을 ‘기회’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기에 의미를 주지만, 기회균등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보

여주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개인의 ‘인식(perception)’에 의존한 응답만을 보여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기회균등 관련 지표들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세대 간 사회적 이동 (OECD, 2010)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은 기회균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자 기회균등의 결과이기도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OECD는 세대 간의 사회적 이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균등 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사회적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들의 소득과 아버지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intergenerational earnings elasticity)이다. 이를 통해서 OECD는 북유럽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남부유럽과 영국이나 미국이 낮은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대 간 소득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본 지표가 소득이라는 한 분야만을 다루고 있으나 다른 지표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지표들과 달리 세대 간에 걸쳐 고착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동성 지표는 OECD(2010, p.186)가 밝힌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효과와 개인의 능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소득이라는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기회균등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기회균등의 다차원을 포착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어오고 있다. 다차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한다. 기회균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연구로 삶의 질을 들 수 있는데,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는 꾸준히 발달해오면서 다양한 지표와 지수를 생산해오고 있다. 석현호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삶의 질이나 사회지표 체계에 대한 소개와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 등의 지표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기회균등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와 지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 기회불평등지수 (Barros et al, 2009)

기회불평등지수는 성별이나 인종, 출생지역 혹은 가족배경 등 개인의 선택을 넘은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발선을 맞추는 것을 추구한다. 기회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기회 차이를 측정한다.

인간기회지수를 생산하고, 또한 소득이나 소비, 교육 등에서의 불평등 등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환경에 의해서 설명되는 기회의 불평등을 제시한다. 인간기회지수를 위해 1)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지, (기초서비스의 적용범위) 그리고 2)얼마나 이러한 기회가 잘 배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여기서 기초서비스는 교육(6학년을 제 때 마치는 아이들 비중과 10-14세의 학교 등록률)과 주거상황(깨끗한 물, 전기, 위생에 대한 접근율)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기회배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간기회지수는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계산한다. 상이지수는 어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모든 집단이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동일하다면 상이지수는 0이 될 것이고, 일부 차이가 난다면, 예를 들어 27%가 된다는 것은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27%의 기회가 재분배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기회지수(O)는 이렇게 상이지수(D)와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P)을 결합하여 생성한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O=P(1-D)$ 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19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인간기회지수를 계산하였다(Barros et al, 2009).

기회불평등지수는 기회의 종류와 분배구조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회의 범위가 교육이나 주거와 같은 일부 기초서비스에만 한정되면서 충분한 이론적 설명 없이 기회를 다소 협소하게 해석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기초서비스의 질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접근성만을 가지고 기회평등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다. 여성경제기회지수 (Economist Intelligent Unit, 2010)

여성경제기회지수(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는 26개의 양적이고 질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113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기회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지수는 크게 노동조건과 정책, 금융접근성,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일반 경영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각 분야는 4-7개 정도의 하위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표는 1에서 100으로 표현되어 각 지표의 평균을 각 분야의 값으로 하고, 각 분야의 값을 특별한 가중치 없이 평균으로 하여 최종 여성경제기회지수를 생산하였다.

여성경제기회지수는 여성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측면부터 경제적, 법적 측면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까지 포괄하여 '기회'를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 영역이 단순히 나열된 측면과 영역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

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경영환경이나 금융접근성 등이 여성의 법적지위, 노동시장의 환경이나 교육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인지가 중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지적될 수 있다.

라. 사회정의지수(Bertelsmann Stiftung, 2011)

사회정의지수(Social Justice Index)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으며 OECD 국가 사회정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정의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변화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정의의 현대적 개념은 기회균등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현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시장경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본 지수는 사회정의를 여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 가중치를 주어 지수를 도출한다. 여섯 가지 부문은 빈곤예방, 교육접근도, 노동시장포함, 사회적 응집과 무차별, 건강인데 각 부문 3개에서 8개까지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은 빈곤율, 아동빈곤, 노인빈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변수들은 1-10의 스케일로 표준화되어 지수에 포함되었다.

본 지수의 또 다른 특징은 각 영역에 정책평가에 대한 질적지표를 포함시키고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질적 평가는 70명 이상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표 설문(<http://www.sgi-network.org/>)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빈곤,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 부문은 가중치를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주어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한계이지만 가중치를 주지 않은 수치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흥미롭게도 OECD 국가 사회정의지수는 가중치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가 거의 동일하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최상위권을 유지하였고, 한국은 20위권에서 머물렀다.

사회정의지수는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분야와 지표들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사회정의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사회정의의 원인이 되는 지표가 함께 동시에 지수 도출에 활용되어 원인과 결과가 혼재된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마. 사회배제지표 (Burchardt et al, 2002)

사회배제지표(Social exclusion indicators)는 기존 단순히 물질적 빈곤만을 초점으로 삶의 기회나 복지를 평가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박탈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영국가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네 가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지표들과 달리 본 지표는 일정 수준과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규모와 변화를 추적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배제는 소비, 생산, 정치적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뉜다. 소비는 자료의 한계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생산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정치적 참여는 선거의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은 청취, 위기시 도움, 지원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 하나라도 결핍된 경우를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지수로 도출하지는 않았으며,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배제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중첩된 배제에 해당하는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사회배제지표는 '배제'라는 개념이 기회균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또한 다른 지표들과 비교했을 때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배제의 대상이 되는 분야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어렵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배제는 기회균등이 결핍되었을 때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지표 안에 원인과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도 흔히 지적되는 한계이다.

2) 기존 지표들의 한계점

지금까지 논의한 기회균등 관련 기존 지표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론적 배경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분야들을 어떤 이유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인 설명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흔히 지수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분야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광범위한 분야를 사용하더라도 분야별 가중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 배경이 충분치 않다는 점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제시된 지수가 현실의 기회균등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여러 지표들이 기회균등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는 투입과 결과지표들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제시된 지수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정의지수의 건강부분 측정에 활용된 지표들 중엔 투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영아사망률과 건강기대수명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OECD의 세대간 사회적 이동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 지수/지표들에서 구조적 기회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지표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Rawls가 지적하였듯이 기회균등이 정의와 연결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흔히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소득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건강기회의 불평등, 문화활동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흔히 자식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현상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부문별로 드러나는 기회균등 문제의 현상만을 고려하는 피상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회균등 지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지표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기회균등 지수는 Rawls와 Sen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의와 기회균등에 대한 이들의 이론적 논의는 왜 기회균등이 철학적, 윤리적으로 중요한 담론이고, 우리 사회가 왜 기회균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어느 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 둘째, Rawls와 Sen의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기회균등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을 체계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기회균등지수를 도출한다. 셋째, 기회균등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지표와 결과지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를 고려하되 통계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여 최종 기회균등 지수를 도출한다. 넷째, 기존 지표들이 지나치게 거시적인 객관지표 위주이거나 미시적인 설문조사 위주였던 점을 고려하여, 객관지표를 근거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거시지수와 설문조사를 근거로 국내 분석을 위한 미시지수를 동시에 개발한다. 다섯째, 특히 국내 분석의 경우 Rawls가 지적한 기회균등의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한 기회균등지수의 도출을 시도한다.

IV.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

1. 지표 및 영역별 가중치

1) 영역별 지표의 가중치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회귀분석에 활용하여 영역별 기회균등지수를 도출하였다. 아래 [표 2]는 각 투입변수들의 가중치 값과 회귀식의 adjusted R²을 보여주고 있다. 투입변수들의 합과 결과를 나타내는 산출변수들을 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adjusted R²의 값을 감안하여 산출변수와 합하는 방식과 감안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감안할 경우 영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산출변수 설명에 한정되어 지수가 생성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adjusted R²의 값을 고려하지 않고 투입지표 합의 표준화 값과 산출변수의 표준화 값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등하게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였다.

[표 2] 영역별 지표 가중치*

capability 분야	측 정 변 수		가중치
건강	산출	Mortality rate(ages 30-70, per100,000)_2008	
	투입 (0.621)	Health policy_2011	0.685
		Private expenditure on health(%) as total_2011	0.213
		Medical doctors per1,000_2011	0.383
		GINI coefficient_2011	0.460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178	
안전	산출	Intentional homicides(per100,000)_2011	
	투입 (0.569)	Social inclusion policy_2011	0.162
		Quality of support network_2013	0.116
		Confidence in police_2011	0.220
		Assault rate_2010	0.577
		GINI coefficient_2011	0.197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167	
교육	산출	PISA score_2011	
	투입 (0.660)	Education policy_2011	0.609
		Age 0-17 poverty rate_2011	0.315
		Public education expenditure(%)_2011	0.210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_2012	0.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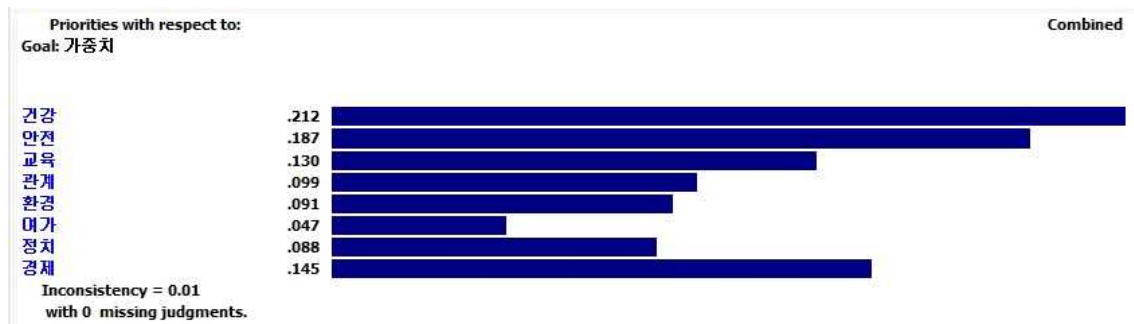
capability 분야	측 정 변 수		가중치
		Family policy_2011	0.359
		GINI coefficient_2011	0.140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155
관계	산출	Internal safety and trust_2010	
	투입 (0.653)	Volunteered time(%)_2010	0.166
		Helped a stranger(%)_2010	0.182
		Social inclusion policy_2011	0.552
		differences in feeling of safety at night_2012	0.165
		GINI coefficient_2011	0.341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171		
환경	산출	Water Quality_2010	
	투입 (0.344)	Waste water treatment_2010	0.049
		Environmental Policy_2011	0.054
		Access to Sanitation_2011	0.171
		GINI coefficient_2011	0.602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030		
여가	산출	Average annual hours worked_2011	
	투입 (0.710)	Part-time employment rate_2011	0.404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_2011	0.771
		Social expenditure_In percentage of GDP_2011	0.305
		GINI coefficient_2011	0.415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193		
정치	산출	Freedom house index_2011	
	투입 (0.784)	Media freedom_2011	0.099
		Corruption perception index_2011	0.401
		Civic activism_2010	0.100
		Non-discrimination_2011	0.244
		GINI coefficient_2011	0.522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021		
경제	산출	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_2011	
	투입 (0.981)	Social inclusion policy_2011	0.313
		Unemployment rate_2011	0.041
		Social expenditure_In percentage of GDP_2011	0.153
		Part-time employment rate_2011	0.152
		GINI coefficient_2011	0.720
GDP per capita (current US\$)_2011	0.119		

* ‘투입’ 아래 괄호 안의 수는 회귀식의 adjusted R²를 나타냄.

2) 영역의 가중치

본 연구에서 영역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한 AHP분석의 결과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전체 50명의 응답자 중 응답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34명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기회균등 영역으로는 건강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 경제, 교육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건강, 경제,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은 예상했던 결과였으나, 안전 분야가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된 것은 다소 의외였다. 이는 아마도 세월호 사고 등 최근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림 4] 영역별 가중치



2. 국가 간 기회균등 비교

국가 간 기회균등 비교에서는 핀란드(0.88), 아이슬란드(0.88), 노르웨이(0.87) 그리고 덴마크/스웨덴(0.85)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북유럽이 기회균등에 있어서 가장 앞선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멕시코(0.09)와 터키(0.37) 그리고 칠레(0.37)는 가장 낮은 기회균등지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전체 31개국 중 20위에 위치하였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공화국,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보다 낮은 기회균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기회균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미국은 0.60로 동유럽이나 남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기회균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북유럽 이외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의 대륙유럽 국가들과 기초적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기회균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기회균등지수와 영역점수는 [표 3]과 같다.

한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안전(0.95)과 교육(0.94)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계(0.66), 건강(0.68) 그리고 환경(0.71)도 평균적인 수준을 보인다. 반면에 여가(0.22)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치

(0.5)나 경제생활(0.5)의 기회균등 역시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은 PISA 점수로 절대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안전은 10만 명당 살인에 의한 사망자를 성과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표 3] 국가별 기회균등지수 및 영역별 점수

순위	국가	종합 ¹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	합계 ²
1	Finland	0.88	0.73	0.92	0.98	0.92	0.85	0.77	1	0.95	7.11
2	Iceland	0.88	0.87	0.93	0.67	0.94	1	0.70	0.94	0.93	6.98
3	Norway	0.87	0.83	0.88	0.61	0.99	0.95	0.92	1	0.92	7.11
4	Denmark	0.85	0.82	0.88	0.60	0.97	0.73	0.97	0.96	1	6.93
5	Sweden	0.85	0.98	0.83	0.59	0.86	0.92	0.74	0.98	0.85	6.75
6	Switzerland	0.85	0.91	0.88	0.73	0.99	0.80	0.69	0.92	0.77	6.69
7	New Zealand	0.83	0.85	0.95	0.79	0.68	0.98	0.65	0.88	0.73	6.50
8	Austria	0.82	0.88	0.91	0.61	0.84	0.88	0.73	0.75	0.84	6.44
9	Canada	0.81	0.80	0.97	0.83	0.76	0.85	0.61	0.84	0.64	6.31
10	Netherlands	0.80	0.76	0.84	0.69	0.81	0.64	1	0.95	0.83	6.52
11	Germany	0.78	0.74	0.89	0.74	0.72	0.70	0.90	0.84	0.80	6.32
12	Luxembourg	0.77	0.83	0.87	0.44	0.77	0.62	0.81	0.92	0.85	6.12
13	Japan	0.76	0.81	0.99	0.75	0.84	0.73	0.55	0.67	0.50	5.84
14	Czech Republic	0.76	0.55	0.94	0.73	0.72	0.73	0.58	0.70	0.98	5.94
15	Ireland	0.75	0.62	0.94	0.58	0.79	0.83	0.66	0.87	0.74	6.02
16	Belgium	0.75	0.81	0.75	0.63	0.89	0.29	0.80	0.92	0.85	5.95
17	United Kingdom	0.74	0.76	0.96	0.65	0.61	0.64	0.75	0.73	0.68	5.78
18	Australia	0.73	0.90	0.95	0.87	0.54	0.19	0.61	0.77	0.55	5.37
19	France	0.72	0.72	0.83	0.51	0.62	0.72	0.86	0.66	0.81	5.73
20	Korea	0.70	0.68	0.95	0.94	0.66	0.71	0.22	0.50	0.50	5.16
21	Spain	0.68	0.83	0.87	0.52	0.57	0.64	0.58	0.66	0.49	5.15
22	Italy	0.68	0.87	0.84	0.56	0.46	0.62	0.60	0.47	0.61	5.02
23	Portugal	0.64	0.72	0.80	0.52	0.41	0.53	0.59	0.71	0.59	4.87
24	Slovak Republic	0.61	0.22	0.90	0.50	0.53	0.86	0.53	0.61	0.83	5.00
25	United States	0.60	0.59	0.89	0.57	0.51	0.53	0.44	0.72	0.36	4.61
26	Poland	0.59	0.20	0.98	0.65	0.49	0.61	0.42	0.67	0.69	4.70
27	Greece	0.59	0.73	0.87	0.39	0.37	0.57	0.34	0.47	0.49	4.23
28	Hungary	0.51	0	0.89	0.52	0.48	0.67	0.42	0.50	0.74	4.23
29	Chile	0.37	0.68	0.67	0.19	0.06	0.05	0.20	0.45	0.12	2.42
30	Turkey	0.37	0.37	0.79	0.21	0.41	0.21	0.27	0.12	0.22	2.60
31	Mexico	0.09	0.37	0	0	0	0.09	0	0	0	0.47

1. ‘종합’ 점수는 각 영역의 기회균등 점수에 영역별 중요도 가중치를 넣어서 재계산한 것이다.
2. ‘합계’ 점수는 각 영역의 기회균등 점수를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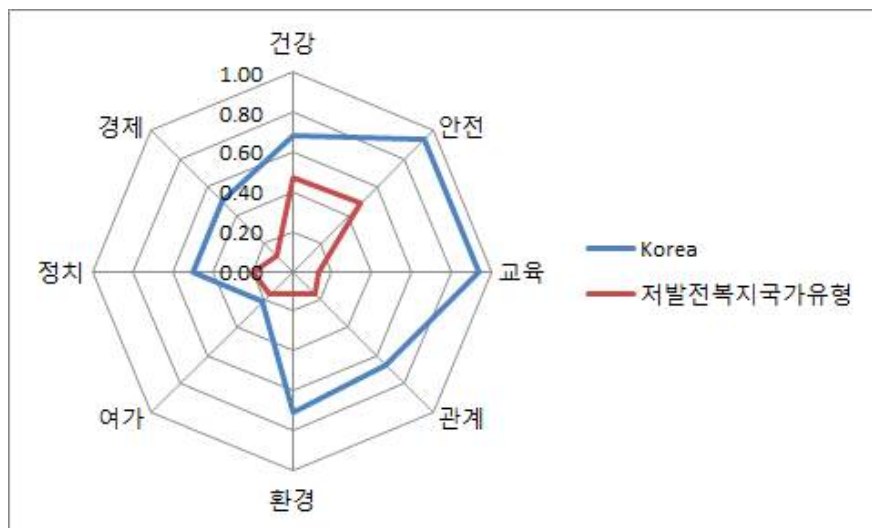
다음은 한국의 기회균등을 국가군 별로 나누어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표 4]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문헌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OECD 복지국가를 7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Esping-Andersen(1990)의 연구에서는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외에도 남유럽복지국가, 동유럽복지국가, 동아시아복지국가 그리고 저발전복지국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들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기회균등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좀 더 상세한 국가별 영역별 기회균등 그래프는 [첨부 1]에 담았다.

[표 4] 복지국가 유형별 소속국가

복지국가 유형	소 속 국 가
저발전복지국가유형	Chile, Mexico, Turkey
동유럽복지국가유형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Slovak Republic
남유럽복지국가유형	Greece, Italy, Portugal, Spain
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	Australia, Canada, Ireland, New Zealand,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보수주의복지국가유형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Luxembourg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유형	Denmark, Finland, Iceland, Netherlands, Norway, Sweden
동아시아복지국가유형	Jap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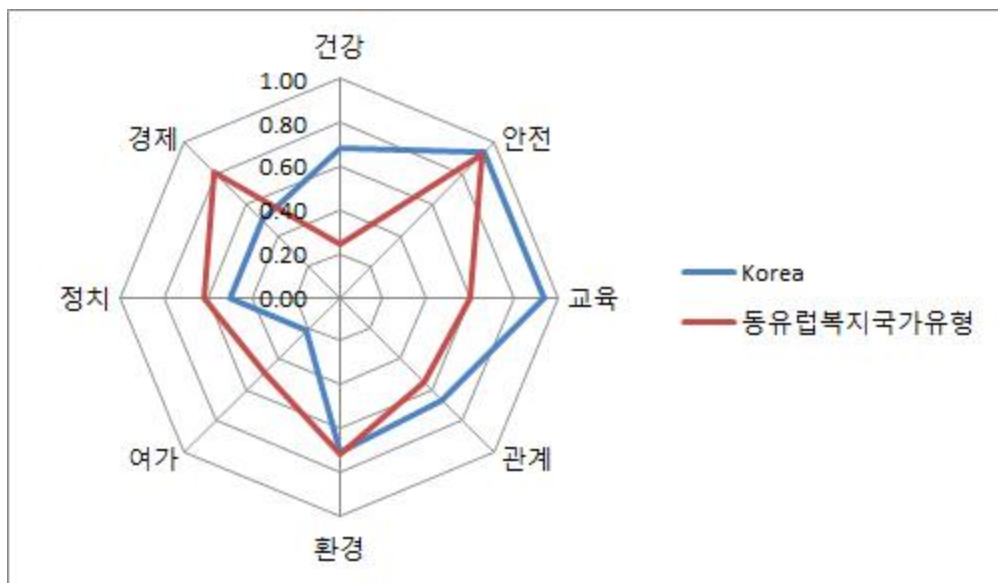
저발전복지국가인 멕시코나 터키 그리고 칠레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거의 전 기회균등 분야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가의 기회균등 정도가 비슷하고, 일부 국가에 따라서 정치나 여가 그리고 경제는 상대적으로 유사하지만, 안전, 환경, 교육 그리고 관계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 내에서 저발전복지국가 유형과 한국은 이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저발전복지국가유형(type1)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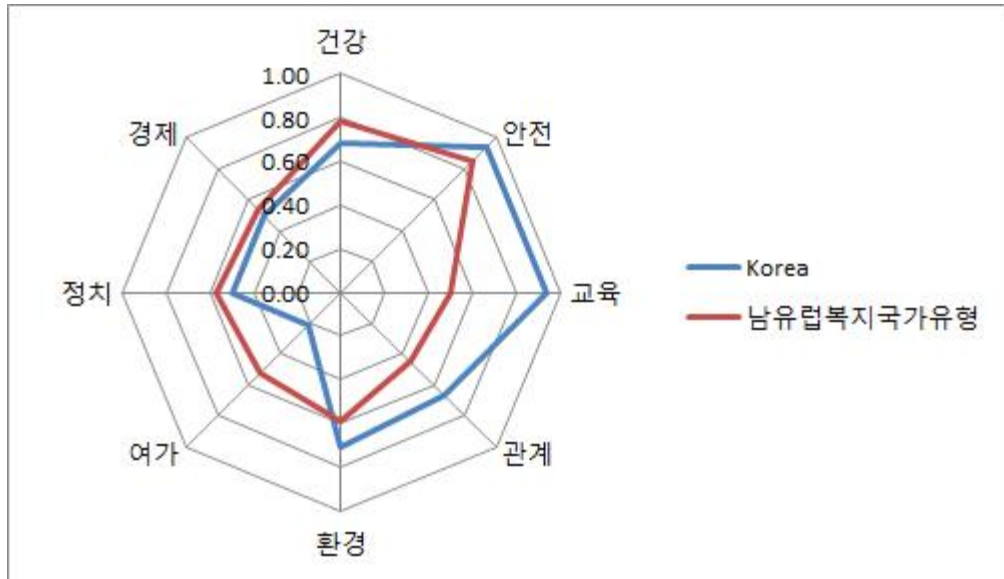
동유럽복지국가유형은 건강이나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은 한국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 건강의 기회균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유럽은 경제적 기회균등 측면에서 확연히 앞서고 있으며, 정치차원이나 여가차원에서도 한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이나 환경의 기회균등에서는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체코가 동유럽에서 월등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동유럽복지국가유형(type2)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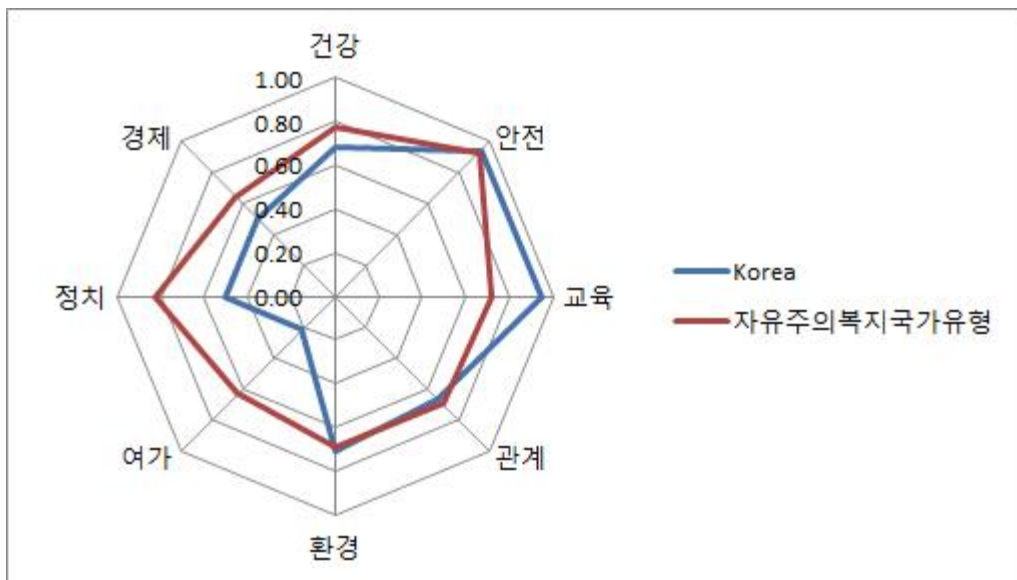
남유럽복지국가와 이 다음에 나오는 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당히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와 한국의 유사성은 김연명(2013)이나 양재진&최영준(2014)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여가는 남유럽이 높고, 교육은 한국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 경제, 건강, 안전 환경 등에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남유럽복지국가유형(type3)과의 비교



이 다음의 소위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들은 한국보다 대체로 좋은 기회균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PISA 점수로 대표되는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수치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거나 월등히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치나 여가에서는 월등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균등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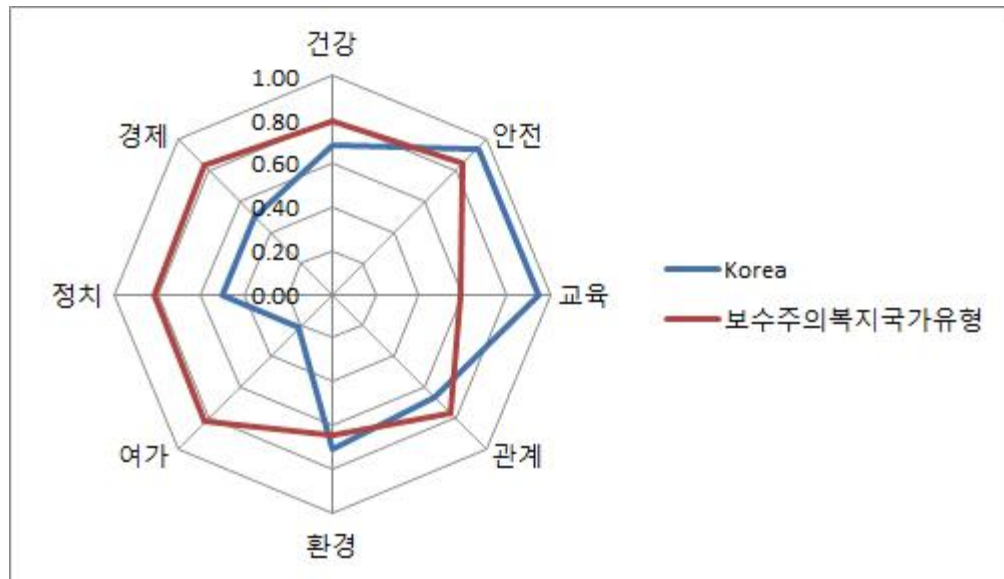
[그림 8] 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type4)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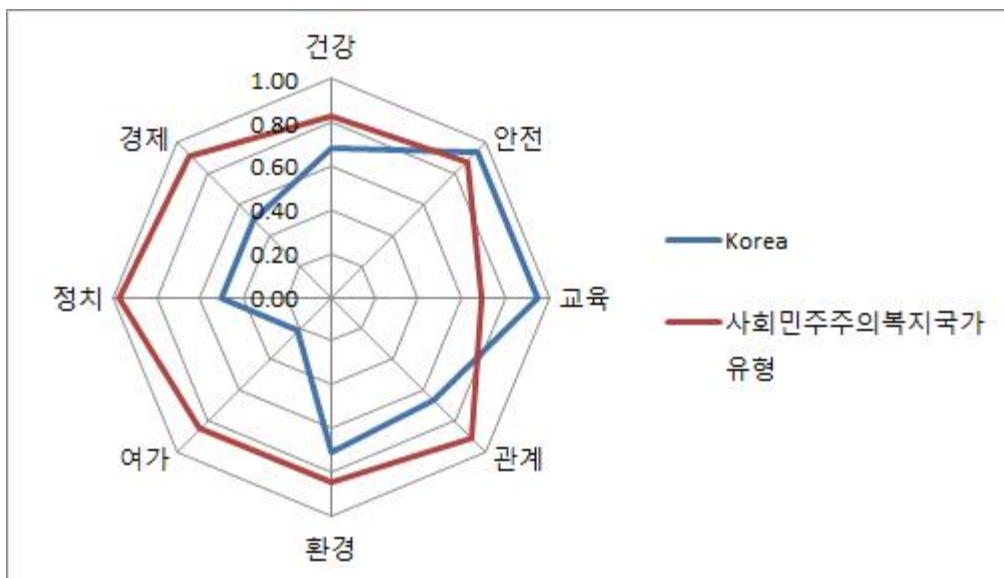
대체로 경제차원의 기회균등이나 여가 차원에서는 보수주의복지국가나 사회

민주주의국가유형이 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유형은 교육부분이 다소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것을 제외하면 전 분야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보수주의복지국가유형(type5)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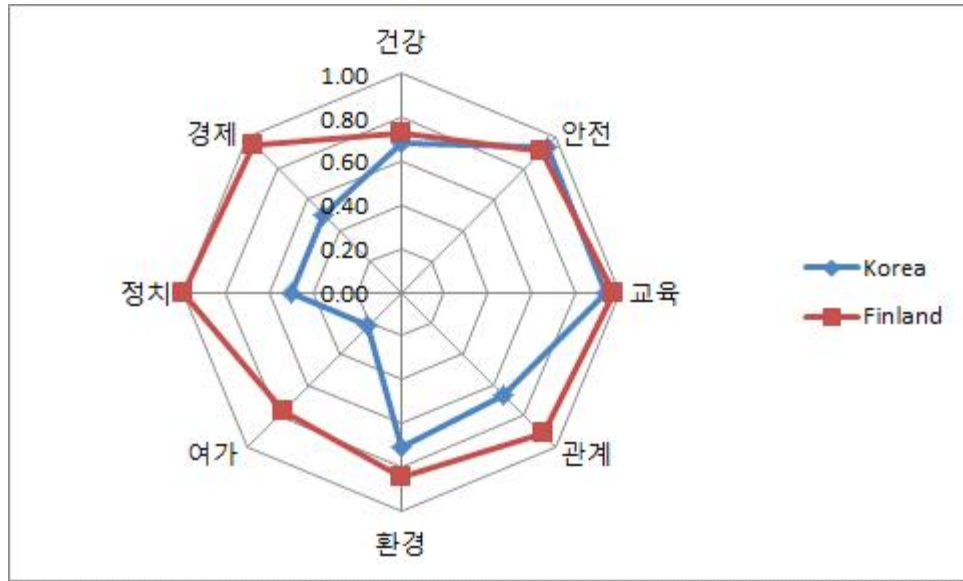
[그림 10]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유형(type6)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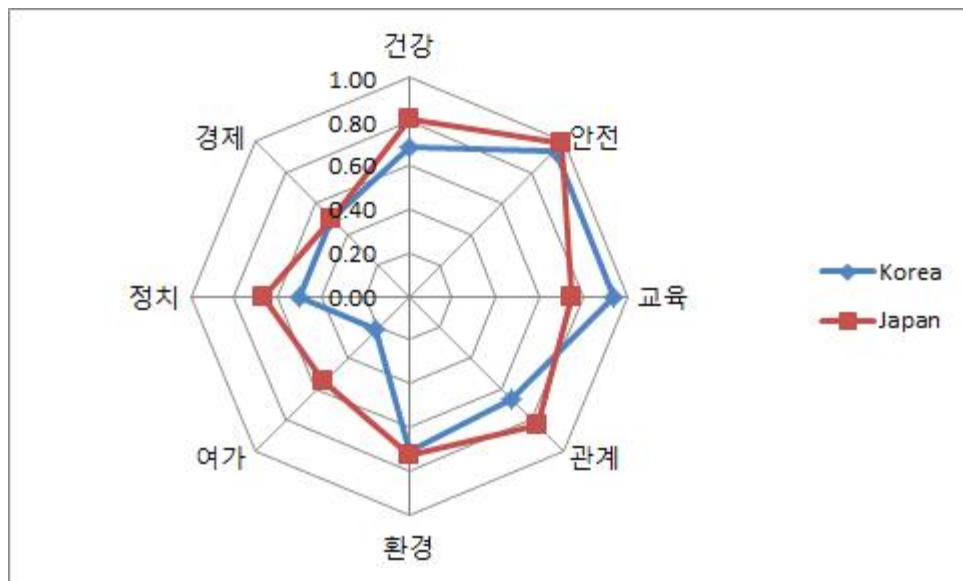
한편 기회균등지수가 가장 높은 핀란드와 우리나라를 영역별로 비교하면 [그림 11]과 같다. 핀란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회균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이나 안전은 한국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건강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 정치, 여가, 관계 분야의 기회균등의 수준은 핀란드와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휴가와 여가를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로 하나로 여기는 핀란드 사회의 문화와 개인보다는 집단, 특히 일과 직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여가 분야의 가장 큰 기회균등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회균등 뿐 아니라 웰빙이나 행복에 미치는 차이를 함의하고 있다.

[그림 11]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비교



[그림 12]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비교



[그림 12]는 우리나라와 기회균등의 수준이 비슷한 일본과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기회균등 수준이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한 일본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여가 기회균등 수준은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역시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V.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1. 분야별 기회균등 비교

1) 분석모델

본 절에서는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8가지 capabilities영역 중에서 다른 영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나머지 7가지 영역의 기회균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즉 개인의 경제수준에 따라 교육이나 건강, 관계, 여가 등의 기회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앞에서 소개한 D-index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각 영역의 기회균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개인 소득(부)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정의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을 측정하는 가장 손쉽고 흔한 방법은 근로소득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있으므로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포괄적인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이와 같이 정의된 포괄적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패널 15차년도에 포함된 개인을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1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분야별 기회균등의 정도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종속변수를 아래 [표 5]와 같이 선정하고 각각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D-index를 산출하였다. 다만 최종적인 기회균등 지수인 O-index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한 분야에 여러개의 종속변수가 사용된 경우 대표 변수 하나만을 지수 계산에 활용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만을 표시해주는 0과 1의 명목변수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SKY 대학 진학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뿐 아니라 개인 건강의 주관적인 평가와 같은 노동패널의 주관적 설문자료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한편 분야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회균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노동패널 5차년도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1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교육, 관계, 여가의 세 가지 분야에 국한되게 이루어졌다.

가. 종속변수

첫째, 건강 분야의 종속변수로는 1) 현재의 건강상태, 2) 3대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유무, 3) 질환치료 여부의 세 가지를 활용하였다.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를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3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포함하고 만성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질환이 있는 경우(치료여부와 상관없이)를 1로 코딩하였다. 또한 치료여부의 경우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지 않은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둘째,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는 명문대 진학여부와 영어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한 종속변수로 활용된 명문대 진학여부는 명문대학을 다음의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들 대학의 진학여부를 1로 코딩하였다. 명문대학을 이와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눈 것은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소득이 진학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엔 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능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을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 1)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 2)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 3)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셋째, 안전과 환경 분야의 종속변수로는 경찰청에서 수집된 10만명당 범죄 건수(3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행)와 한국도시통계에서 발췌한 1인당 생활폐수 발생량을 사용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개인이 범죄율과 폐수 발생량 기준 상위 10%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사건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넷째, 관계와 여가 분야는 노동패널의 설문 문항 중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것들을 활용하였는데 사회적 친분관계와 여가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만족과 만족으로 대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경우엔 새로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는지의 유무에 따라 차별을 경험한 경우를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여 1로 코딩하였다.

[표 5] 기회균등 영역별 종속변수

구분	종 속 변 수	세 부 내 용
건강	현재 건강상태	1 : 아주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0 :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중증질환+만성질환 유무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및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진단경험 1 : 있지만 완치되었다. 있어서 치료중이다,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0 : 없다
	질환 치료여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및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진단경험 1 : 있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0 : 있지만 완치되었다. 있어서 치료중이다.
교육	SKY대학 진학	1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0 : 기타 학력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진학	1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0 : 기타 학력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학교 진학	1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 0 : 기타 학력
	영어 구사능력	1 : 외국인과 업무상 논의가 가능하다.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 하다 0 : 거의 할 수 없다.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일상회화정도는 가능하다.
안전	10만 명당 강력 범죄건수 상위10%	동아일보(13/8/23) 전국 3대 강력범죄 지도 1 :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상위 10% 지역 0 : 기타 모든 지역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생활만족도-사회적 친분관계 1 : 매우만족, 만족 0 :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환경	1인당 폐수발생량 상위10%	한국도시통계 (09-12년 자료) 중 1일 1인당 총폐수발생량 1 : 상위 10% 지역 0 : 기타 모든 지역
여가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여가활동 1 : 매우만족, 만족 0 :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정치	차별경험 유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때 1: 차별을 겪고(은 적이) 있다 0 : 없다. 결측 : 해당사항 없음

나. 독립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위에서 설명한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래 [표 6]과 같이 분야별로 적절한 추가변수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교육 분야의 분석에선 분석 대상이 교육이므로 공통 설명변수 중 교육수준을 제외하였다. 가장 중요한 공통 설명변수는 소득 분위인데 예측확률은 소득분위가 1분위에서 10분위로 변함에 따라 1로 코딩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표 6] 분야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구분	건강	교육	안전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공통 설명 변수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성별	성별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교육수준		교육수준	교육수준	교육수준	교육수준	교육수준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추가 설명 변수		아버지 교육수준	건강 인식정도	직업 여부	건강 인식정도	근로시간 만족도	
종속 변수1	건강인식 정도	SKY대학 진학	10만명당 범죄건수 상위10%	사회적 친분관계	1인당 폐수발생량 상위10%	여가 만족도	차별경험 여부
종속 변수2	3대+만성 질환	+포카 서성한					
종속 변수3	질병 치료여부	+중경외시					
종속 변수4		영어 구사능력					
5차 비교		SKY대학 진학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만족도	

2) 분야별 D-index

앞에서 제시한 분석 모형을 통해 분야별 관심 사건이 발생할 예측확률과 D-index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예측확률과 D-index의 계산에는 노동패널 15차년도(2012년)와 5차년도(2002년) 자료가 활용되었다.

가. 건강

건강분야는 소득에 따라 기회균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보장률이 2013년 기준 62%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다. 이러한 환경은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건강의 기회균등 정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건강분야에 활용된 종속변수는 1)현재의 건강상태, 2)3대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유무, 3)3대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여부의 세 가지이다. 따라서 건강분야의 기회균등은 소득 분위에 따른 1)현재 건강하다는 응답여부, 2)3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유무, 3)질환 치료여부의 예측확률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아래 [표 7]은 소득분위에 따라 각각의 종속변수들의 예측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표 7] 15차년도 건강분야 기회균등(2012년)

건강 소득분위	1) 현재건강상태		2) 중증+만성질환		3) 질환 치료여부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예측확률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6456	0.1068	0.0527	0.0910	0.1330	0.0736
9분위	0.6180	0.0808	0.0555	0.0689	0.1369	0.0609
8분위	0.5897	0.0541	0.0585	0.0458	0.1410	0.0478
7분위	0.5607	0.0269	0.0616	0.0215	0.1452	0.0345
6분위	0.5312	0.0008	0.0649	0.0041	0.1494	0.0208
5분위	0.5016	0.0286	0.0684	0.0309	0.1538	0.0067
4분위	0.4720	0.0565	0.0720	0.0590	0.1583	0.0076
3분위	0.4425	0.0841	0.0758	0.0885	0.1628	0.0223
2분위	0.4135	0.1114	0.0798	0.1194	0.1675	0.0373
1분위	0.3850	0.1382	0.0839	0.1518	0.1723	0.0527
평균	0.5321		0.0644		0.1559	
D-index		0.6882		0.6808		0.3641

우선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다’ 혹은 ‘건강한 편이다’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예측확률을 살펴보면 소득 10분위(상위 10%)에서는 64.6%에 달하는데 소득 1분위(하위 10%)에서는 38.5%에 그치고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의 차이가 1.7배에 달한다. 전체 응답자의 긍정평가 평균 비율인 52.3%와의 차이를 고려한 D-index는 0.69로 나타났다.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의 유무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었는데, 소득 10분위에서 이들 질환을 가지고 있을 예측확률은 5.3%인데 반하여 소득 1분위에서는 8.4%로 두 그룹 간에는 1.6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치료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예측확률은 소득 10분위가 13.3%, 1분위가 17.2%로 앞의 두 변수와 비교할 때 소득 그룹 간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D-index의 경우에도 0.36으로 앞의 두 경우보다 적게 나타났다.

나. 교육

교육은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것이다. 2014년 기준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16.6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통계청, 2015), 실질적 의미의 교육 기회균등을 논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다.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분석은 바로 소득이 변함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SKY로 불리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줌으로 해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은 명문대학의 범위를 달리하여 소득의 차이에 따른 이들 대학으로의 진학여부와 사교육 시장과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격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교육은 우리사회에서 기회균등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로 나타났다.

[표 8] 15차년도 교육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1) SKY 대학 진학		2)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진학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0125	0.5465	0.0232	0.3522
9분위	0.0105	0.3778	0.0204	0.2508

8분위	0.0088	0.2362	0.0180	0.1612
7분위	0.0074	0.1172	0.0158	0.0822
6분위	0.0062	0.0173	0.0139	0.0124
5분위	0.0052	0.0665	0.0123	0.0491
4분위	0.0043	0.1368	0.0108	0.1032
3분위	0.0036	0.1957	0.0095	0.1510
2분위	0.0030	0.2451	0.0084	0.1930
1분위	0.0026	0.2865	0.0073	0.2301
평균	0.0060		0.0136	
D-index		2.2256		1.5853

		3)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진학		4) 영어 구사능력	
소득분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0319	0.2558	0.0177	0.5097	
9분위	0.0289	0.1852	0.0147	0.3371	
8분위	0.0262	0.1210	0.0122	0.1936	
7분위	0.0237	0.0626	0.0101	0.0744	
6분위	0.0215	0.0096	0.0084	0.0244	
5분위	0.0195	0.0385	0.0069	0.1064	
4분위	0.0176	0.0821	0.0057	0.1743	
3분위	0.0160	0.1217	0.0047	0.2305	
2분위	0.0144	0.1576	0.0039	0.2771	
1분위	0.0131	0.1901	0.0032	0.3157	
평균	0.0211		0.0088		
D-index		1.2241		2.2431	

우선 명문대학 진학률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을 명문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분위별 진학가능성을 예측해 본 결과 소득 10분위의 경우 예측확률이 1.25%로 나타난 반면 소득 최하위인 1분위에서는 예측확률이 0.26%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무려 4.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index도 기회균등을 평가하는 7개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2.23으로 계산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명문대 진학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 현상이 교육 분야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문대학의 범위를 다소 넓은 경우에는 기회불평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SKY 대학과 함께 명문대학의 범주에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포함시켜 진학가능성을 예측한 결과, 예측확률이 소득 10분위에서는 2.32% 소득 1분위에서는 0.73%로 두 그룹간의 차이가 3.2배로 줄어들었다. 또한 명문대학의 범위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까지 포함시키자 명문대 진학 예측확률의 차이는 2.4배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D-index도 두 번째 명문대 그룹에서는 1.59, 세 번째 명문대 그룹에서는 1.22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를 사교육시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는 영어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통역이 가능할 정도의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할 예측확률은 소득 10분위의 경우 1.77%인데 반하여 소득 1분위는 0.32%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SKY대학 진학의 경우와 비슷한 5.5배에 달했다. 또한 그 결과 D-index도 명문대학의 범위를 넓혀서 계산한 경우 보다 높은 2.2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의 교육 기회 불평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기회불평등의 중심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최상위권 대학과 사교육시장의 주요인인 영어구사능력이 위치하고 있음이 분석 결과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은 칠레,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칠레와 함께 세계 주요국들 중 최저 수준임을 고려할 때(OECD, 2014), 소득수준은 대학입학과 대학교육 기회의 뚜렷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회균등 지수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본 절의 분석에서는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즉 국가 간 비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대표적인 예가 PISA 점수임) 평가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기회는 상당히 고르게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SKY 대학 진학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중시하는 상대적인 엘리트 교육에 대한 기회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기회균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 안전

세월호 사고와 같은 최근의 대형 안전사고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득격차에 따른 주거안전이나 환경안전의 차이의(예를 들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범죄율이 더 높다던가 저소득층 일수록 발전소와 같은 환경오염 시설 근처에 거주할 확률이 더 높은 문제 등) 문제가 뚜렷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안전의 불평 등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안전분야의 기회균등은 3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의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에(기초자치단체 기준) 거주할 예측확률을 소득 분위별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표 9]에 의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범죄율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 확률이 9.1% 정도로 나타났으나, 소득 1분위에서는 12.9%로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가 낮아짐에 따라(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앞의 건강이나 특히 교육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다. 최상위 소득집단과 최하위 소득집단 간의 예측확률 차이는 약 40% 남짓인데, 이는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D-index도 건강이나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0.50으로 계산되었다.

[표 9] 15차년도 안전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범죄건수 상위10%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0907	0.0732
9분위	0.0944	0.0558
8분위	0.0982	0.0377
7분위	0.1022	0.0189
6분위	0.1063	0.0005
5분위	0.1106	0.0207
4분위	0.1150	0.0415
3분위	0.1196	0.0630
2분위	0.1244	0.0853
1분위	0.1292	0.1083
평균	0.1062	
D-index		0.5049

이러한 결과는 국가 간 비교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안전 분야 기회균등의 정도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에 속하였다. 국내 평가에서도 안전 분야의 기회균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라. 관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관계의 양과 질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OECD에서 발간한 2014년 Better Life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quality of support network” 은 77점으로 조사 대상인 34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생기므로 관계의 양과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관계 분야의 기회균등 평가를 위해서 종속변수로는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노동패널의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매우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답할 예측확률을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표 10]에 의하면 소득 10분위 응답자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이 64.4%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경우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사회적 친분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소득 1분위 응답자가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34.5%로 낮아졌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에서 사회적 친분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의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예측확률을 기준으로 도출한 D-index값도 0.81로 교육 분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건강분야 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Better Life Index의 “quality of support network” 에 대한 조사와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0] 15차년도 관계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6346	0.1270
9분위	0.6033	0.0960
8분위	0.5711	0.0643

7분위	0.5383	0.0319
6분위	0.5052	0.0009
5분위	0.4720	0.0337
4분위	0.4391	0.0662
3분위	0.4067	0.0982
2분위	0.3751	0.1294
1분위	0.3445	0.1596
평균	0.5061	
D-index		0.8072

마. 환경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같은 좋은 환경에 둘러 싸여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좋은 환경을 접하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발전소 인근지역 처럼 공해 발생 가능성으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에 따라 향유하는 환경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환경 분야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도시통계 자료 중 주민 1인당 폐수배출량이 상위 10%인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폐수배출량으로 대리 측정하였고, 상대적으로 오염된 환경을 가진 지역에 거주하게 될 예측확률이 소득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11]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위 10%의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게 될 예측확률을 보여준다. 소득 10분위의 개인이 오염도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은 9.8%인데 소득 1분위의 개인이 오염도 상위 10% 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은 8.9%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예상과는 반대로 오염도 상위지역에 거주할 예측확률이 고소득층의 경우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이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를 1인당 폐수배출량이 아닌 공기오염정도를 가지고 측정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소득분위에 따른 예측확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차이에 따라 거주환경의 오염도가 크게 달라지는 환경의 기회불균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환경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기의 질이나 수질을 중심으로 평가한 전반적인 환경의 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리 높지 않다. OECD Environmental Statistics (2011)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환경의 질은 OEC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11] 15차년도 환경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1인당 폐수배출량 상위10%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1000	0.0292
9분위	0.0986	0.0217
8분위	0.0972	0.0143
7분위	0.0958	0.0070
6분위	0.0944	0.0002
5분위	0.0931	0.0073
4분위	0.0918	0.0143
3분위	0.0905	0.0213
2분위	0.0892	0.0281
1분위	0.0879	0.0349
평균	0.0945	
D-index		0.1782

마. 여가

여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얼마나 양질의 여가시간을 가지는지를 들고 있다. 실제로 행복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휴가기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여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패널의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 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을 소득에 따라 계산하여 여가에 대한 기회균등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아래 [표 12]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소득 10분위 그룹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은 42%에 달하는데 반하여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소득 1분위 그룹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만족 혹은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할 예측확률을 15.9%에 머물렀다. 두 그룹 간의 예측확률 차이는 2.6배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D-index도 1.28로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7개 기회균등

평가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여가 기회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고용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5%에 달하고 이들의 시간 당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5.8% 수준이다 (통계청, 2014). 저임금 고용불안정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2-3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여가활동 만족도 격차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다.

[표 12] 15차년도 여가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여가 만족도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4199	0.2348
9분위	0.3840	0.1720
8분위	0.3494	0.1114
7분위	0.3162	0.0534
6분위	0.2849	0.0014
5분위	0.2555	0.0529
4분위	0.2281	0.1008
3분위	0.2029	0.1449
2분위	0.1798	0.1853
1분위	0.1589	0.2220
평균	0.2857	
D-index		1.2789

바. 정치

정치 분야는 기회균등의 여러 가지 영역 중 아마도 가장 생소한 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차별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정치의 기회균등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패널자료에서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차별 여부를 묻는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예측확률을 구해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을 평가하였다.

아래 [표 13]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별 경험의 예측확률을 보여준다. 최상위 소득 10분위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할 예측확률이 12.3%인데 비하여, 최하위 소득 1분위의 경우엔 그 비율이 25.1%로 상승한다.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 간의 차별 경험 가능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 결과 D-index도 1.09로 교육, 관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2014년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차별 요인은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의 51.4%).

[표 13] 15차년도 정치분야 기회균등(2012년)

소득분위	차별경험 유무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거리
10분위	0.1227	0.1323
9분위	0.1335	0.0998
8분위	0.1452	0.0648
7분위	0.1577	0.0273
6분위	0.1711	0.0128
5분위	0.1853	0.0555
4분위	0.2005	0.1010
3분위	0.2166	0.1491
2분위	0.2335	0.2000
1분위	0.2514	0.2536
평균	0.1668	
D-index		1.0962

사. 교육, 관계, 여가분야의 기회균등 변화

본 절의 분석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기회균등의 7개 분야 중 교육, 관계, 여가 분야의 기회균등이 지난 10년 간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의 대상을 교육, 관계, 여가의 세 분야로 한정짓은 것은 노동패널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모든 분야의 시계열 변화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14]는 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교육, 관계, 여가 분야의 예측확률과 D-index이다. 교육분야는 앞에서 제시한 네가지 종속변수 중 SKY 대학 진학여부를 5차년도 기회균등 계산에 활용하였다.

우선 5차년도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소득 10분위와 소득 1분위에 속한 개인

이 SKY대학에 진학할 예측확률은 각각 1.7%와 0.4%로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예측확률 차이가 약 4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차년도 자료에서 나타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4.8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수준으로 지난 10년 간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수준이 악화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D-index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5차년도의 D-index가 1.87인데 비하여 15차년도의 D-index는 2.23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관계와 여가 분야의 기회균등의 정도는 지난 10년 간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5차년도의 관계분야 소득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예측확률 차이는 1.94배로 15차년도의 1.84배에 비하여 차이가 다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분야의 D-index도 15차년도의 0.81에 비해서 5차년도에는 0.86으로 지난 10년간 소폭 하락하였다. 여가의 경우에도 D-index를 기준으로 5차년도에 1.42였던 것이 15차년도에는 1.28로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관계와 여가 부문의 D-index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 시계열 자료가 아닌 두 시점 간의 비교이다 보니 실제 지난 10년 간의 추세가 하향추세였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두 시점간의 차이로 미루어보아 교육과 비교할 때 관계와 여가 부문의 기회균등 정도가 지난 10년 간 다소 향상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정도의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5차년도 교육, 관계, 여가분야 기회균등(2002년)

소득분위	교육(SKY 진학)		관계		여가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Predicted Probability	표준화된 평균과의 거리
10분위	0.0175	0.4282	0.5067	0.1482	0.2047	0.2496
9분위	0.0150	0.2972	0.4770	0.1102	0.1831	0.1707
8분위	0.0129	0.1845	0.4475	0.0724	0.1634	0.0985
7분위	0.0111	0.0875	0.4183	0.0351	0.1454	0.0326
6분위	0.0095	0.0041	0.3897	0.0015	0.1291	0.0272
5분위	0.0081	0.0676	0.3618	0.0372	0.1144	0.0811
4분위	0.0070	0.1291	0.3348	0.0717	0.1011	0.1296
3분위	0.0060	0.1819	0.3089	0.1049	0.0893	0.1731
2분위	0.0051	0.2273	0.2841	0.1366	0.0787	0.2119
1분위	0.0044	0.2662	0.2605	0.1668	0.0692	0.2464
평균	0.0094		0.3909		0.1365	
D-index		1.8735		0.8847		1.4207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7개 기회균등 분야의 D-index를 정리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심각한 기회의 불평등을 보이는 분야는 교육 분야이다. 특히 SKY 대학 진학여부나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사

회의 교육 기회균등 정도는 다른 분야들 비교할 때 훨씬 열악한 수준인데, 이는 다른 분야의 기회불평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본 절의 분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교육은 바로 그 소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기회불평등은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여러 역량 분야의 기회불평등으로 이어져 우리사회 전반의 불평등 현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교육불평등 현상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악화되어 온 정황이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완전한 시계열 자료가 아니라 2002년과 2012년 두 해의 자료만을 비교하여 단정적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10년 사이에 소득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 속한 가계의 개인이 SKY대학에 진학할 확률의 격차가 확연히 벌어진 것은 교육 기회균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이외의 분야에선 여가와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가가 부족하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소득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5] 7개 기회균등 분야 D-index 요약

구분		15차(2012)	5차(2002)
건강	1	현재 건강상태	0.689
	2	중증질환+만성질환	0.681
	3	질환 치료여부	0.364
교육	1	SKY 진학	2.226
	2	+포, 카, 서, 성, 한 진학	1.585
	3	+중.경, 외, 시 진학	1.224
	4	영어구사 능력	2.243
안전	10만명당 강력범죄건수 상위10%		0.505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0.808
환경	1인당 폐수방출량 상위10%		0.178
여가	여가 만족도		1.279
정치	차별경험 유무		1.421
			1.096

2. 종합 기회균등 지수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기회균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0-index를 아래 [표 16]과 같이 계산하였다. 0-index는 건강, 교육, 안전 등 앞에서 제시한 8개 기회균등 분야 중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제 분야를 제외한 7개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가 3장의 식 (4)와 같이 종합되어 산출된다. 각 분야의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설문을 바탕으로 도출되고 분야별 중요성을 반영한 D-index의 합으로 0-index를 도출한다. 아쉽게도 2012년 한 해의 0-index만을 가지고는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에 관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매년 축적하고 그에 따라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다면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가능할 것이다.

[표 16] 2012년 우리사회의 기회균등과 0-index

기회균등 분야	Weight	D-index	Weighted D-index
건 강	0.212	0.688	0.146
교 육	0.130	2.226	0.289
안 전	0.187	0.505	0.094
관 계	0.099	0.807	0.080
환 경	0.091	0.178	0.016
여 가	0.047	1.279	0.060
정 치	0.088	1.096	0.096
0-index			1.281

V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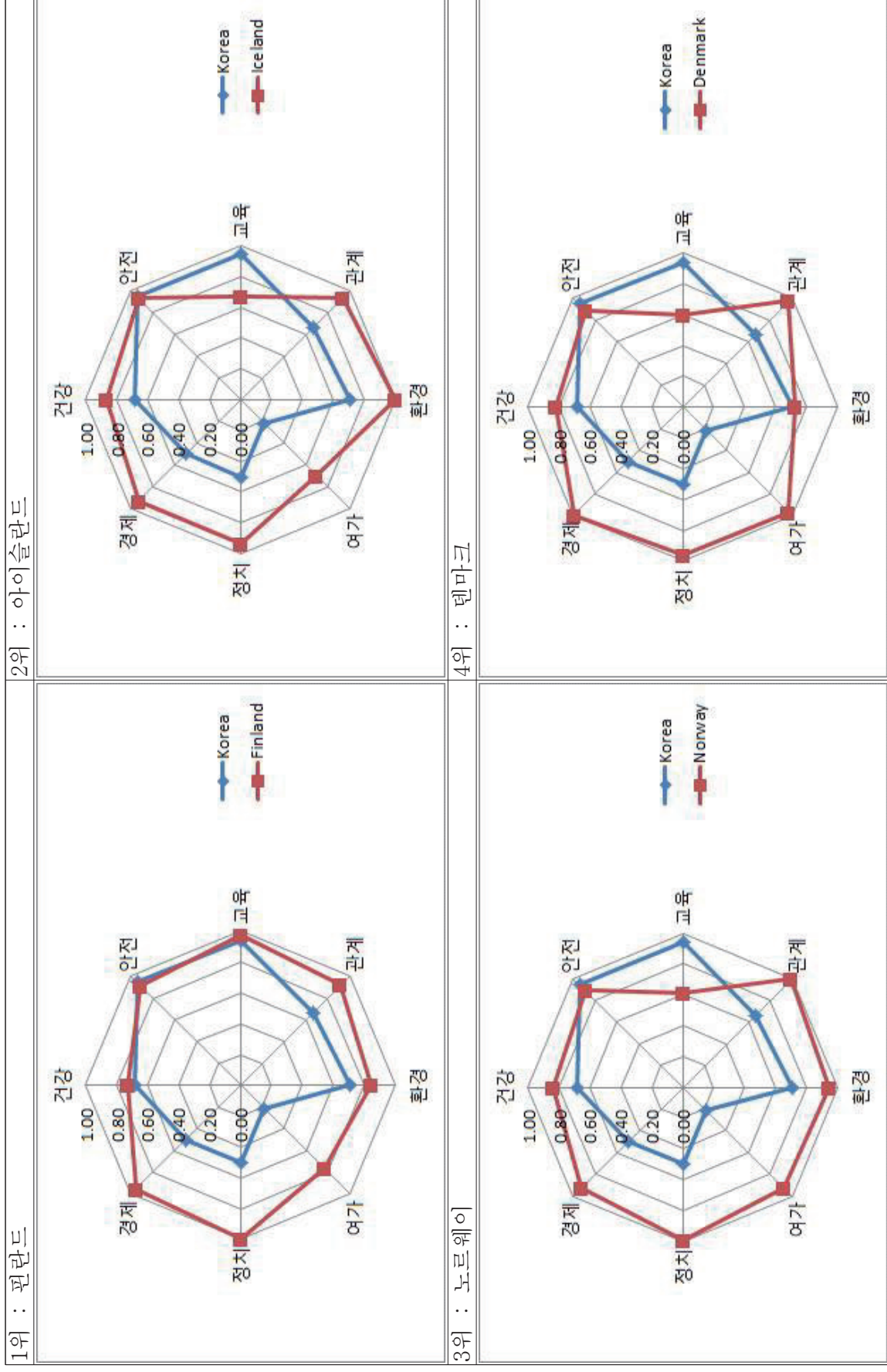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염두해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첫째는 기회균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기회균등 문제를 소득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Sen이 잘 알려진 에세이 “Equality of what?” 에서도 강조하듯이 소득과 같은 수단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기회균등의 논의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capability와 같이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Sen과 Nussbaum의 capability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capability가 기회균등 개념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플랫폼으로 건강, 안전, 교육, 관계, 환경, 여가, 정치, 경제의 8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론적으로 도출된 기회균등 8개 영역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각 영역과 국가 전체의 기회균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방법과는 차별화되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영역별로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구분하여 산출지표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의 계수값을 투입지표의 가중치로 활용하여 분야별 기회균등 지수를 계산하였다. 국가 수준의 기회균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회균등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도출된 기회균등 지수를 통합하였다.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정도는 OECD 31개 회원국 중 20위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안전의 기회균등 정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데 비하여 다른 영역, 특히 여가, 정치, 경제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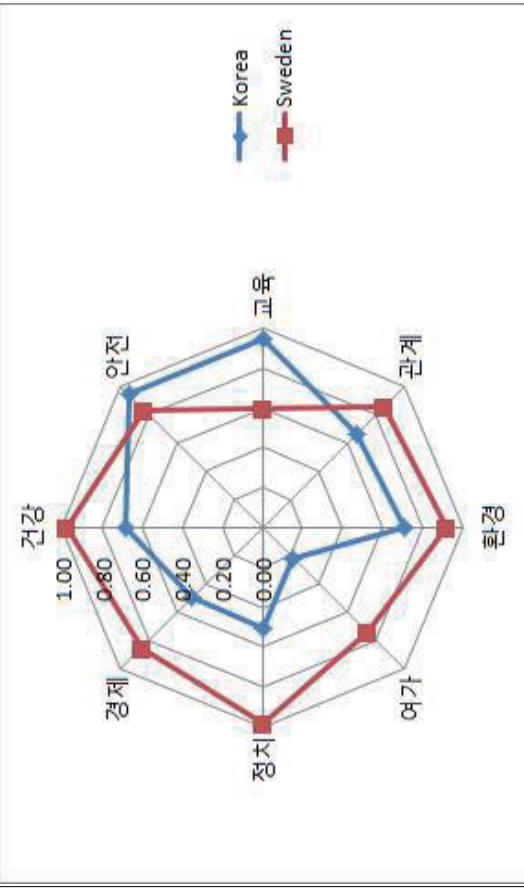
셋째, 기회균등의 국가 간 비교분석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한 기회균등의 평가가 어려워 우리사회의 영역별 기회균등 정도를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의 기회균등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영역별 기회균등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 부문의 기회균등과 다른 부문의 기회균등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해서 기회균등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경제 분야를 제외한 7개 영역 중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분야의 기회불평등은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 이외에도 여가와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여가와 정치 분야의 기회균등 정도가 열악한 것은 국가 간 비교 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기회균등 문제는 국가 간 비교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서 독립적인 국내 기회균등 분석이 가지는 가치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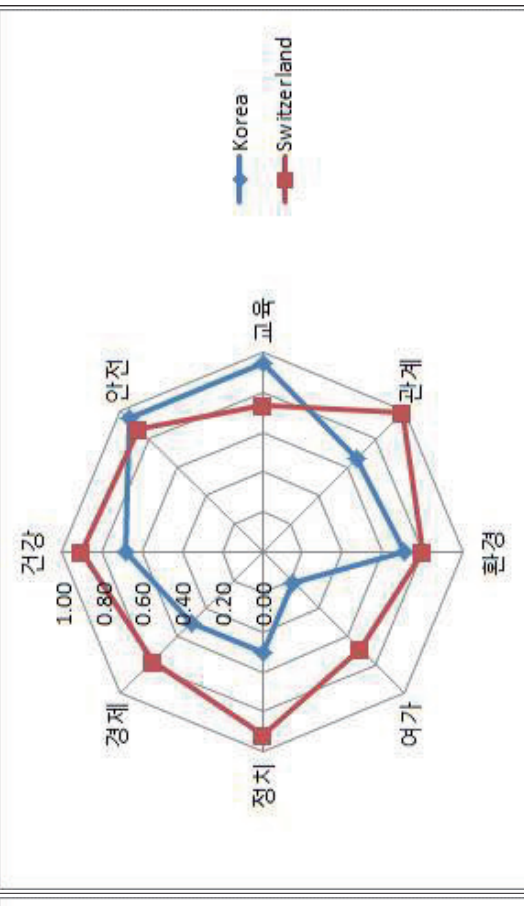
[첨부 1] 국가별 기회균등 영역 점수 분포 - 우리나라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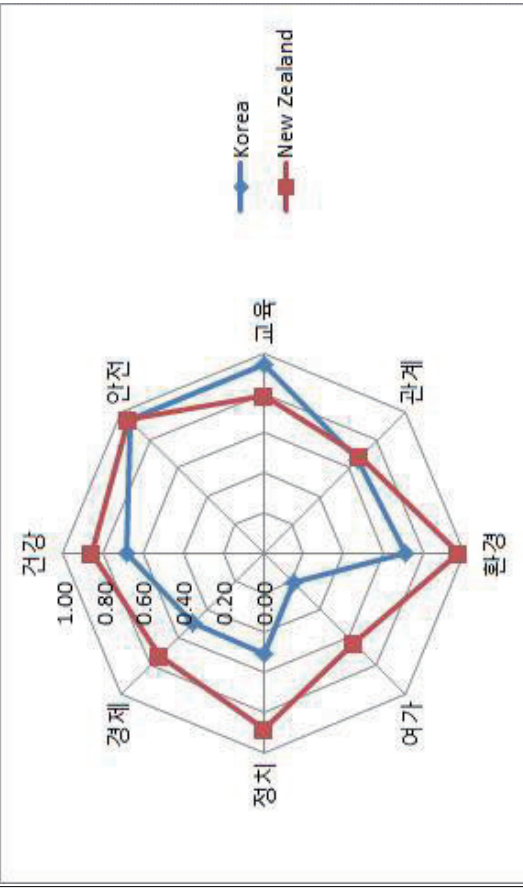
5위 :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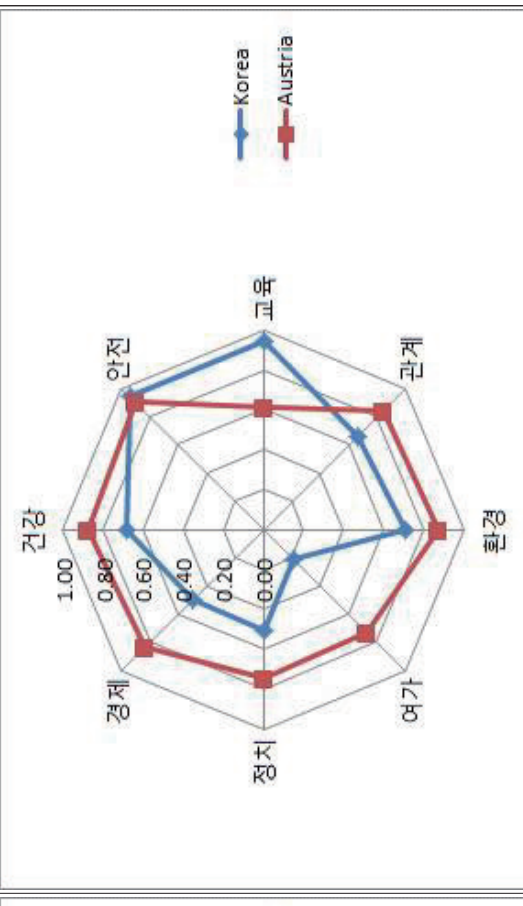
6위 :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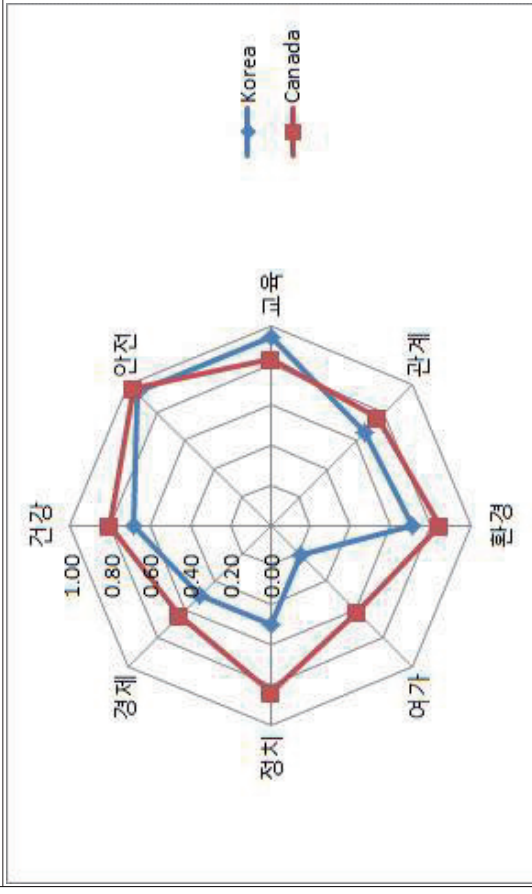
7위 :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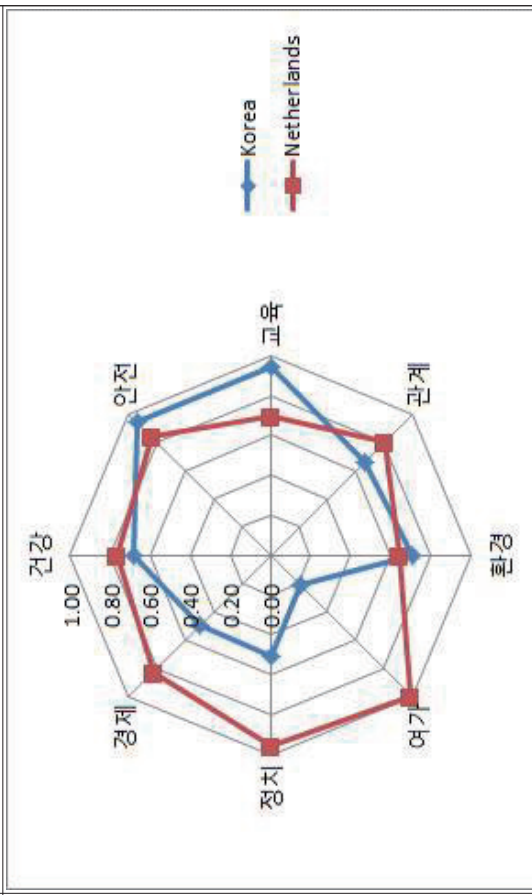
8위 : 오스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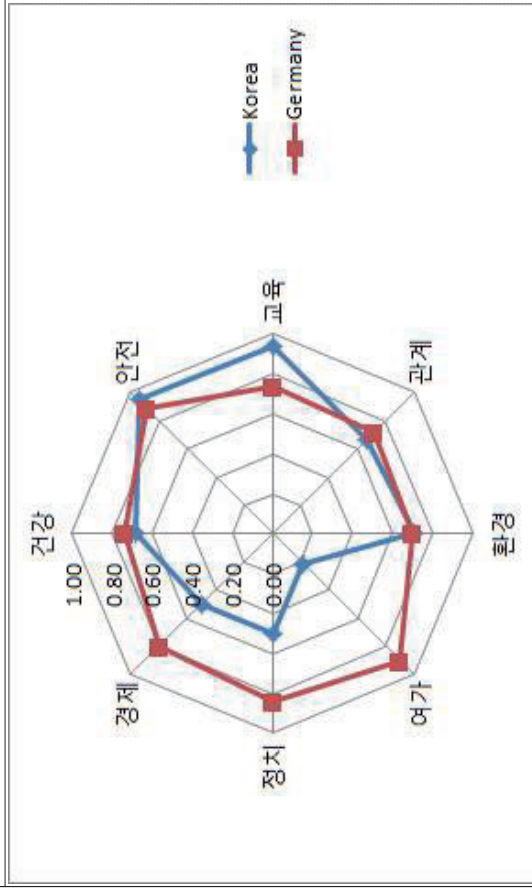
9위 :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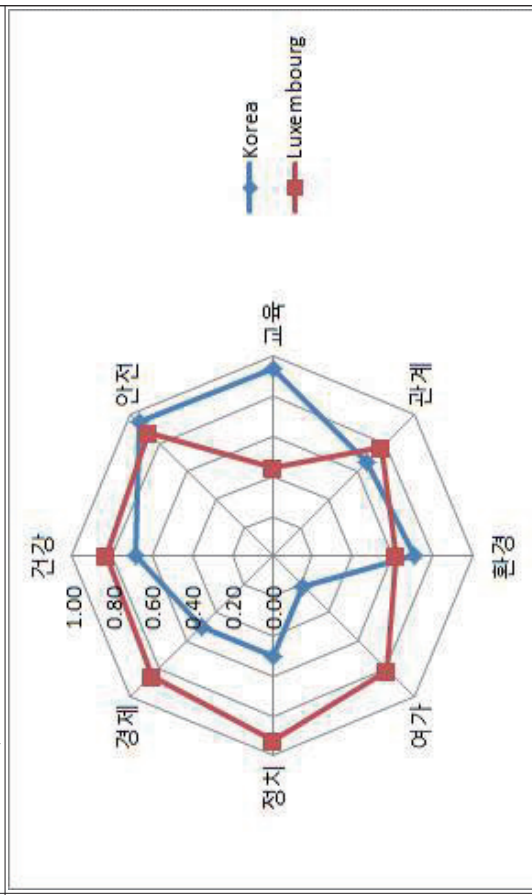
10위 :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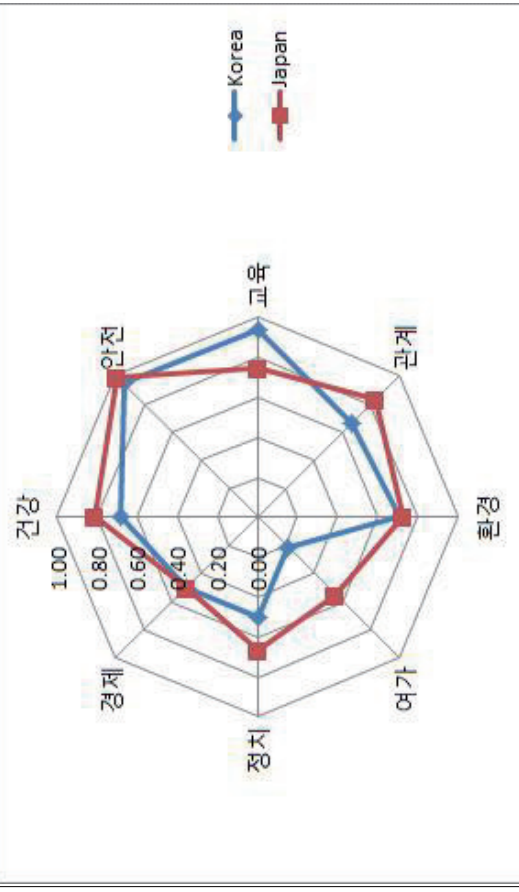
11위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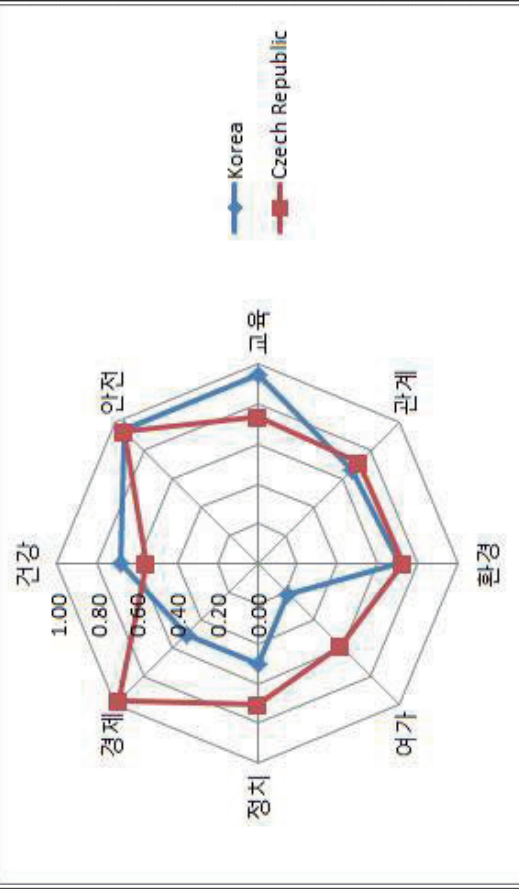
12위 : 룩셈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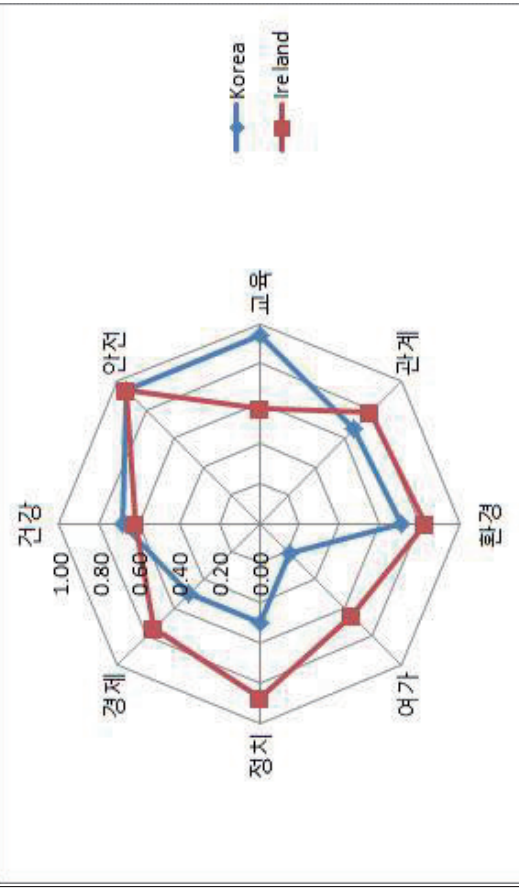
13위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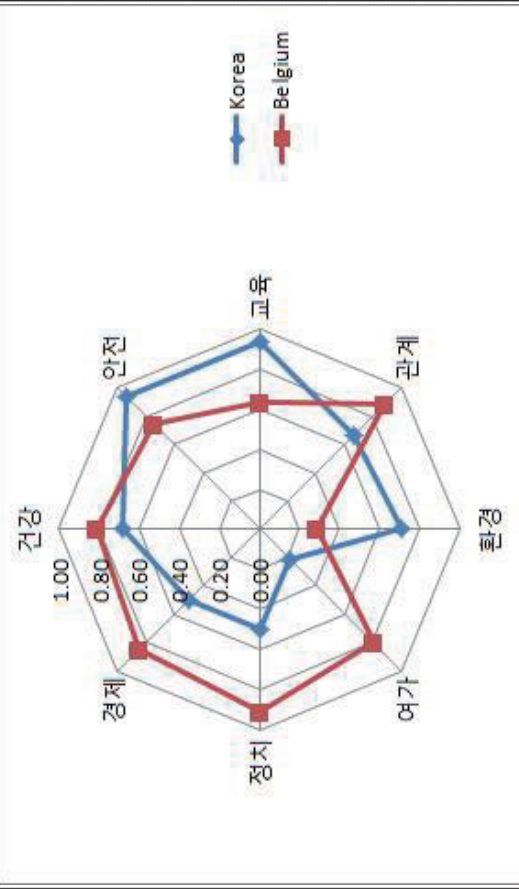
14위 : 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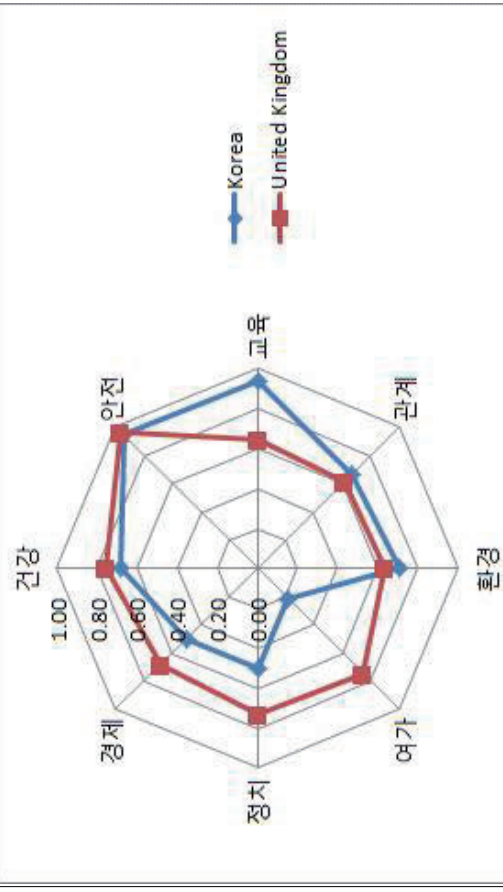
15위 :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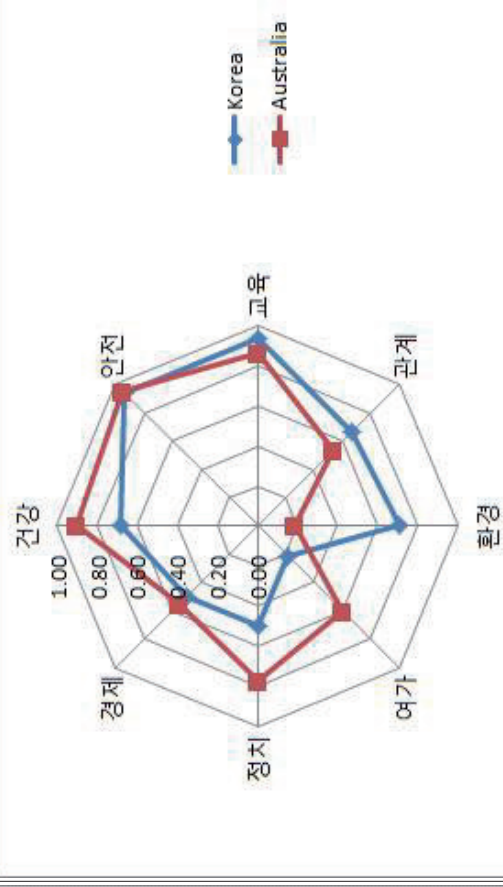
16위 :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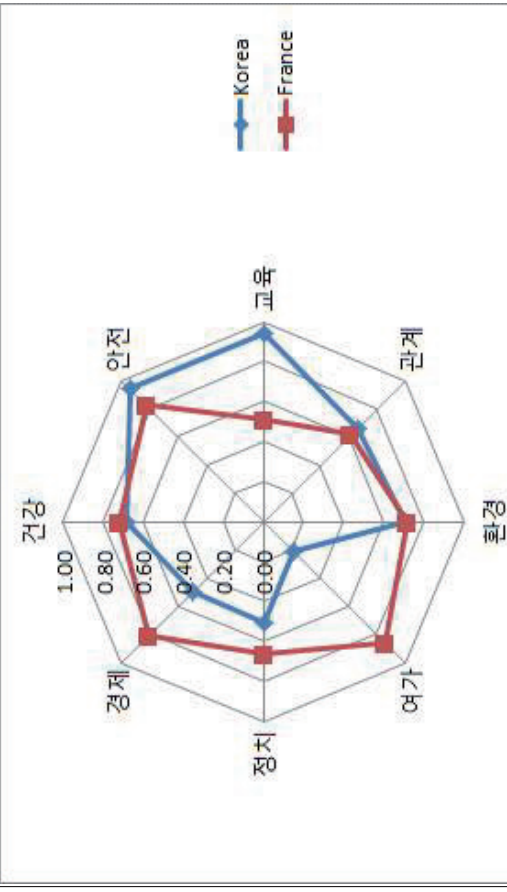
17위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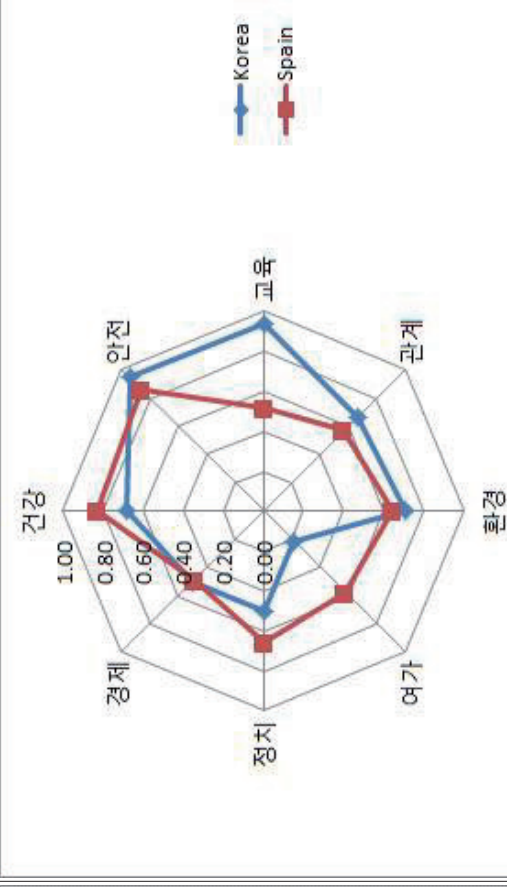
18위 :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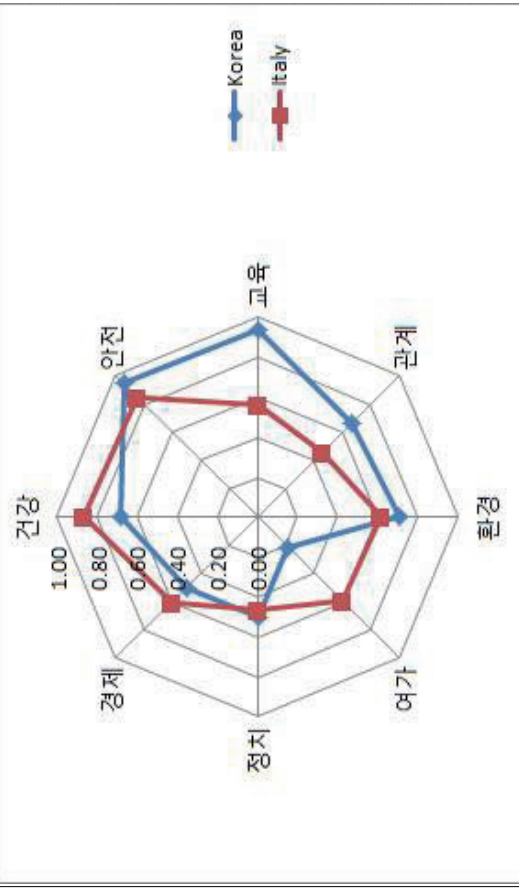
19위 :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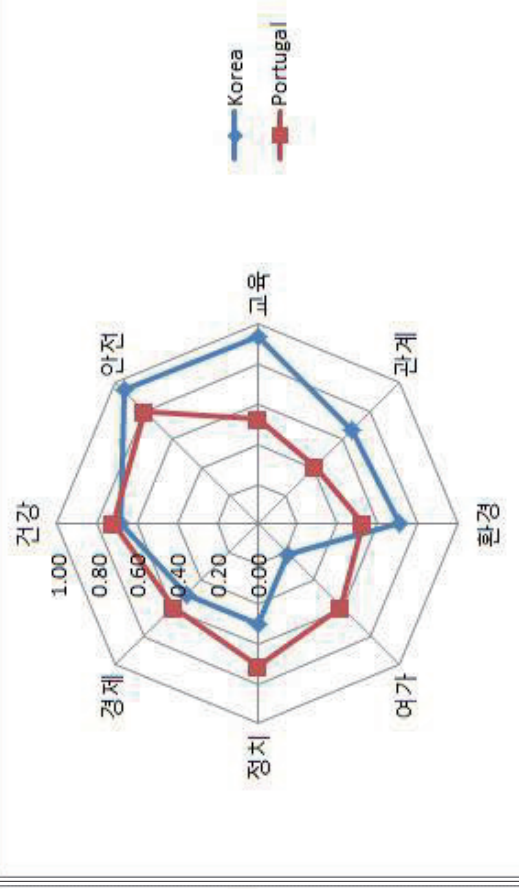
21위 :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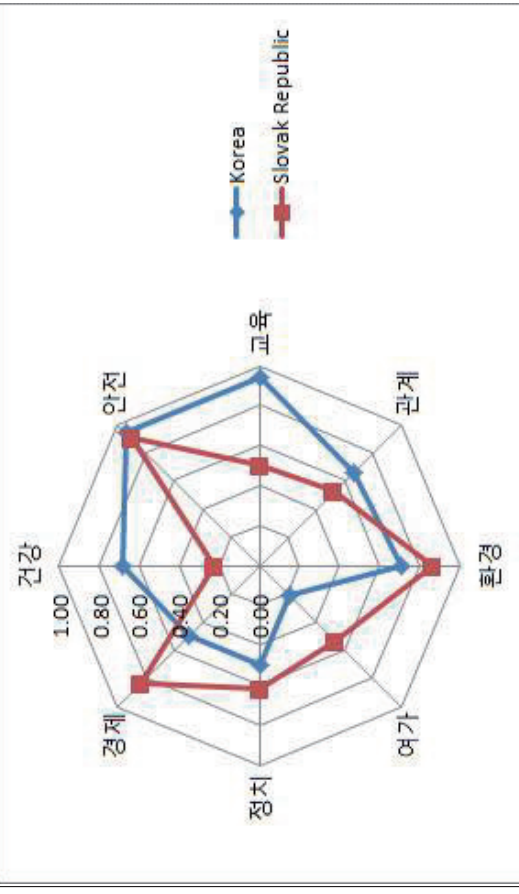
22위 :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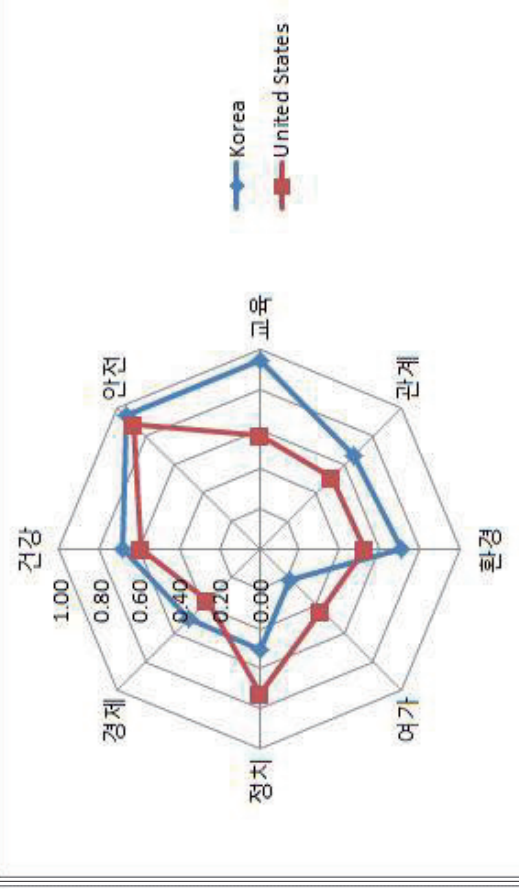
23위 : 포르투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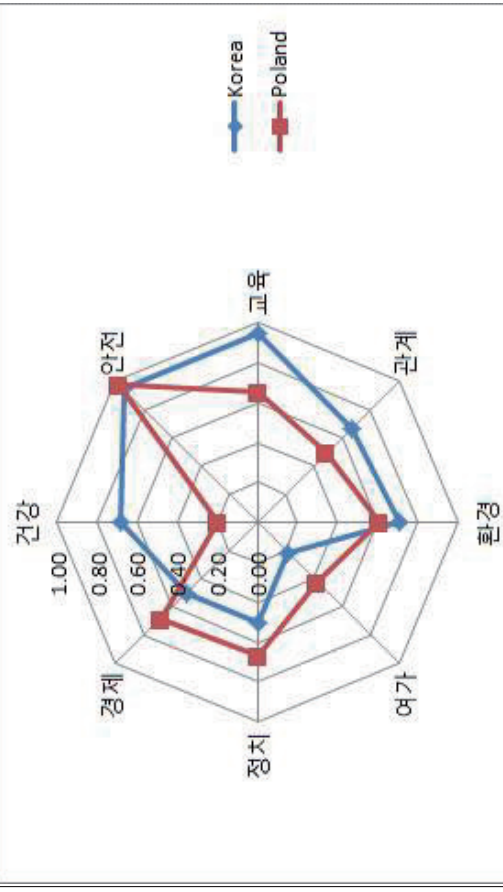
24위 : 슬로바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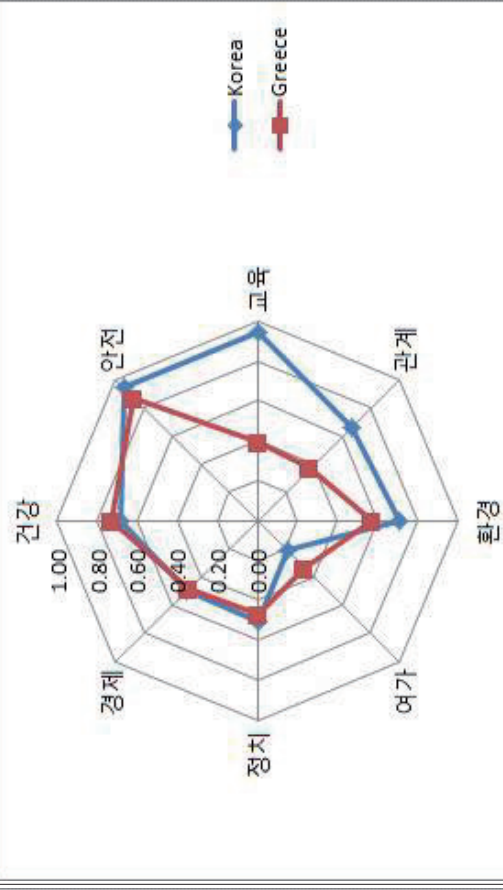
25위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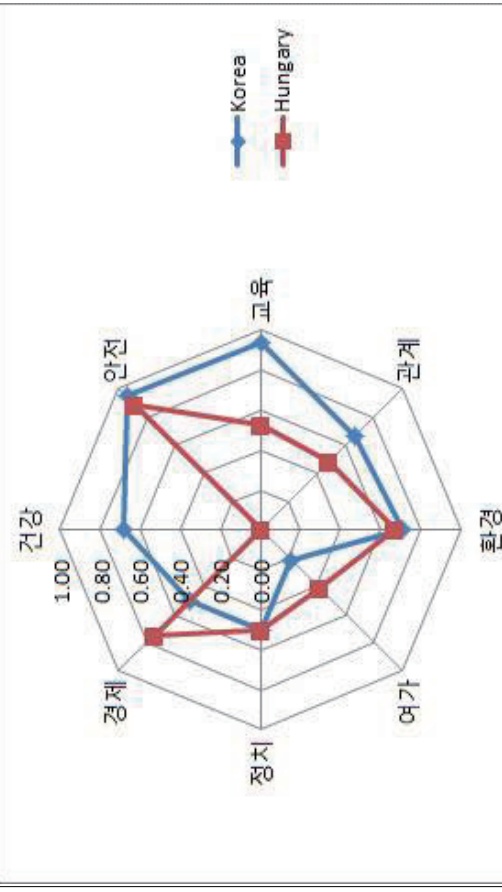
26위 :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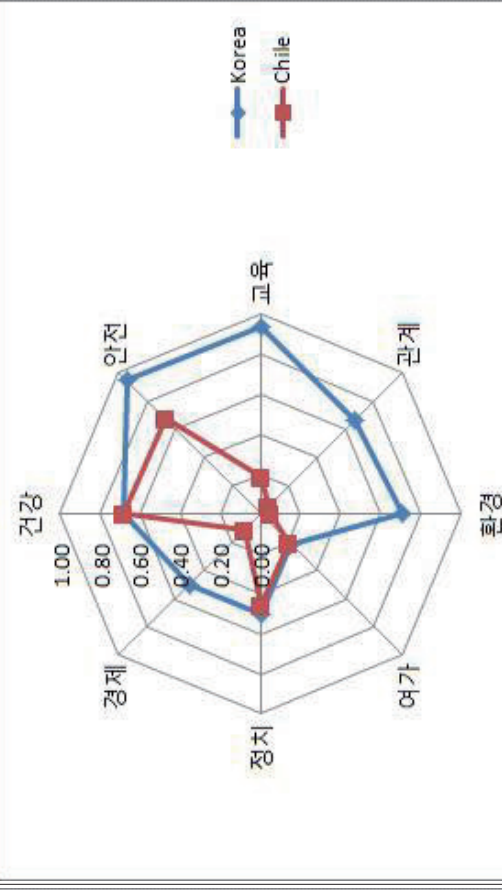
27위 : 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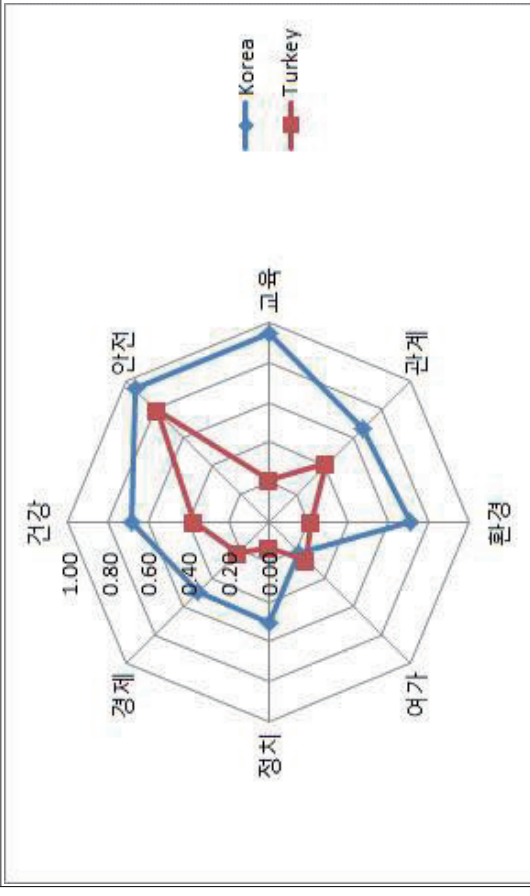
28위 :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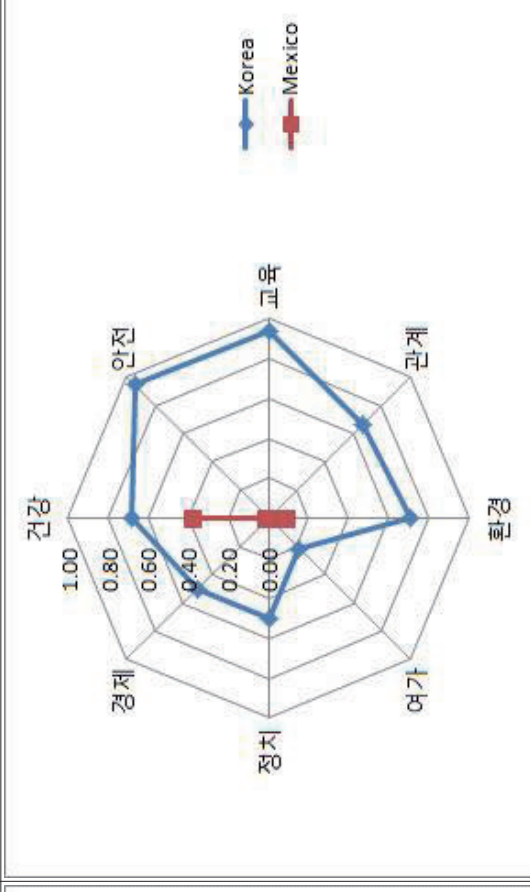
29위 : 칠레



30위 :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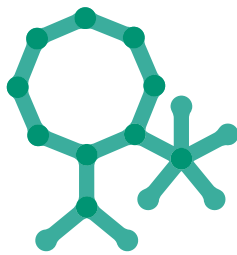


31위 : 멕시코



[참고문헌]

- Barros, R. P., Ferreira, F. H., Molinas Vega, J., and Saavedra Chanduvi, J. 2009. 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orld Bank.
- Esping-Andersen, G. 2013.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John Wiley & Sons.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f Human Values*. Salt Lake City: Univ of Utah Press
- Nussbaum, M. C.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4. Better Life Index
-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 OECD. 2011. Environmental Statistics
- 김연명. 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단일호), 27-59.
- 석현호 외. 2013. 국가주요지표 연구 I: 지표체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양재진·최영준. 2014.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과제. 동향과전망, 9-50.
- 서울시. 201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15. 2014 3/4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사교육비 분석 보도자료



도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135-7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

Tel 02.3470.3600 Fax 02.3470.3601

www.thecircle.or.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9 772465 777001
ISSN 2465-7778